

가계금융복지조사(2010~2020)

## 가구소득 및 재무구조 변화 분석

### ④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이한진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021. 12. 2



보고서는 민주노동연구원 홈페이지([kctuli.kctu.org](http://kctuli.kctu.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문의: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주소: 04518 서울 중구 경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전화: 02-2670-9221 팩스: 02-2670-9299 이메일: [kctu-li@nodong.org](mailto:kctu-li@nodong.org)

민주노동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및 이슈페이퍼는 민주노총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                              |    |
|------------------------------|----|
| 〈요약〉 .....                   | 1  |
| 1. 들어가며 .....                | 7  |
| 2.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    |
| 1) 가구소득 및 지출 관련 변화 .....     | 10 |
| 2) 가구 재무(자산 & 부채)상태 변화 ..... | 26 |
| 3) 가구 재무 건전성 추이 .....        | 33 |
| 3. 나가며 .....                 | 38 |

# 요약

본 보고서는 통계청,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 지난 11년간(2010~2020년) 우리나라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소주제별로 연속하여 조사·분석 중인 자료다. 1차 보고서는 전체 가구소득 및 재무 항목들의 평균과 중앙값을 활용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했었다. 2차 보고서는 가구주 특성 중 ‘성별 & 종사상 지위별’ 가구 집단의 소득 및 재무상태를 분석한 것이었다.

지난 3차 보고서는 가구주 특성 중 ‘교육 정도 및 연령대별’ 가구 집단의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분석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가구주가 대졸 이상인 가구와 고졸인 가구 간 소득 및 자산 격차가 2016년 이후 급격하게 커지고 있었으며,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더 심각한 상태였다. 둘째, 가구주 학력 및 연령대별 자산 불평등이 커지고 있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부채 레버리지를 통한 재테크와 더불어 2016년 이후 주택 가격의 급등’이었다. 셋째, 가구분포가 급감하고 있는 20대 가구는 사실상 내 집 장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지출을 급격하게 늘리는 등 ‘N포세대’의 특징이 잘 반영하고 있었다. 넷째,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위험 수위에 도달한 가구의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채무상환 여력이 급락하게 될 것으로, 주택 가격 급등에 따라 자산 불평등이 심해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시 현실 경제가 받게 될 충격 등을 고려한다면, 부동산 시장으로 향하는 다주택자 재테크 용 대출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번 보고서는 가구 특성 중 ‘소득 5분위별’ 가구 집단의 소득 및 재무상태가 어떻게 변화해왔고, 그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소득 5분위별 가구원 수 변화를 보면, 소득이 적을수록 가구원 수가 더 많이 줄었고,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가구원 수는 더 많았다. 소득 최하위인 1분위 가구원 수 감소율은 -15.6%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 최상위인 5분위의 2020년 평균 가구원 수는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구주 평균 연령은 대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높았는데, 2020년 기준 1분위 평균 연령은 67.7세로 가장 많았고, 2분위(57.6세), 3분위(52.7세)가 그 뒤를 이었으며, 5분위 가구는 51.4세로 4분위(51.0세)보다 0.4세가 더 많았다.

2020년 기준 경상소득은 5분위 가구가 13,90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4분위(7,126만원), 3분위(4,671만원), 2분위(2,763만원), 1분위(1,155만원) 등이었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경상소득 증가율은 1분위 가구가 70.12%로 가장 높았지만, 1분위 가구의 소득 순증액은 476만원은 5분위 가구 순증액 5,079만원의 9.4% 수준에 불과했다.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의 비소비지출 추이를 보면, 5분위 가구가 2010년 1,761만원에서 2020년 3,049만원으로 1,287만원이 늘어나 73.09%의 증가율로 가장 많이 늘었다. 그 결과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5분위 가구가 53.69%로 가장 낮았고, 1분위 가구는 76.27%로 가장 높았으며, 2분위(60.04%), 3분위(62.01%), 4분위(60.51%) 등으로 세후 소득개선 효과가 미미하지만 나타났다. 하지만 처분가능소득 순증액은 5분위(3,792만원), 4분위(2,230만원), 3분위(1,509만원), 2분위(889만원), 1분위(436만원) 등으로 여전히 격차가 컸다. 게다가 비소비지출에 공적연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고소득 가구의 경우 현재의 높은 비소비지출 중 일부는 미래 연금소득이나 실업 급여 등으로 되돌려 받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현행 소득세제 및 정부 지원금 등은 소득 불평등 해소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5분위 가구소득 대비 1분위와 4분위 가구소득 비중 추이를 비교해 보면, 2012년 이후 세후소득과 세전소득 간의 비중 차(처분가능소득 비중 - 경상소득 비중)가 1분위보다는 4분위 가구에서 분명하게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바, 세후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소득 최하위 가구인 1분위보다 차상위 가구인 4분위 가구에서 더 분명하게 관찰되었다. 이는 소득 불평등 해소 차원에서 소득세제 및 공적 지원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소득 5분위 비목별 소비지출 추이를 보면, 소비지출증가율은 1분위(41.13%), 2분위(25.34%), 3분위(20.39%), 4분위(19.45%), 5분위(11.17%) 등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소비지출증가율은 더 높았다. 소득 5분위 가구 집단 모두 식료품과 주거비, 의료비 지출은 증가했고, 교육비 지출은 감소했다. 5분위 가구와 비교할 때 1분위 가구의 식료품비, 주거비 및 의료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으며, 특히 주거비와 의료비는 순증액 또한 1분위 가구가 더 많았다.

1분위 가구의 1인당 소비지출액은 2012년 465만원에서 2020년 750만원으로 285만원이 늘어나 61.29%의 증가율로 5분위 가구 1인당 소비지출 증가율 14.26%(1,166→1,333만원)를 압도했다.

5분위 가구 대비 1분위의 식료품비 비중을 보면, 2012년 23.17%에서 2020년 27.25%로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1인당 식료품비 비중을 산출하면 53.58%에서 70.06%로 16.48%p나 상승, 1분위 가구의 식료품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세, 주택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연료비 등을 포괄하는 주거비의 경우 1인당 주거비를 산출해보면, 1분위가 14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분위(140만원), 3분위(119만원), 5분위(117만원), 4분위(107만원) 등이었다. 2017년 이후 저소득 가구 집단인 1, 2분위 가구의 주거비가 급증했는데, 2016년을 기점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주택 가격 상승이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2020년 기준 5분위 가구 대비 1인당 교육비 비중을 보면, 가구주 평균 연령이 2분위(57.6세), 3분위(52.7세), 4분위(51.0세), 5분위(51.4세) 등으로 편차가 크지 않아, 비슷한 연령대의 학령기 자녀가 있을 것으로 추정 가능한 상태에서, 소득 차상위 가구 집단인 4분위 가구조차 5분위 가구의 58.20% 수준에 불과했고, 3분위 가구는 38.85%, 2분위 가구는 20.16%에 머물렀다. 학력별 소득 격차가 매우 큰 우리 사회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의 소득 불평등이 미래 세대에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소득 5분위 가구 집단 모두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었는데, 특히 하위 가구인 1분위(63.41%), 2분위(65.31%)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을 산출해보면 1분위 가구가 9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분위(77만원), 5분위(69만원), 4분위(63만원), 3분위(59만원) 등이었다.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저축가능액 순증액은, 5분위 2,399만원(3,749→6,148만원), 4분위 1,192만원(1,350→2,542만원), 3분위 697만원(642→1,339만원), 2분위 296만원(248→544만원), 1분위 19만원(-61 → -42만원) 등으로, 1분위 가구는 여전히 적자상태였다.

2020년 12월 기준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4,299만원으로, 5분위 가구의 경우 2020년 기준 저축가능액을 16.96년을 모으면 살 수 있었지만, 4분위 가구는 41.03년, 3분위 가구는 77.89년, 2분위 가구는 191.73년을 필요로 하는 등 사실상 서울에서 자가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매년 저축가능액이 마이너스로 적자상태인 1분위 가구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었다. 현재 무주택 상태인 가구 모두 주거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

정부(통계청)가 균등화 소득 기준으로 발표하는 소득 5분위 배율 추이를 보면, 균등화 시장소득 5분위 배율은 2012년 11.21배에서 2020년 11.56배로 소폭 늘어났지만,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8.32배에서 6.25배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간 격차도 꾸준히 커지고 있는 등, 정부 발표로는 세후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른 명목소득 데이터(2010~2011년)를 가지고 전체 가구 평균소득 대비 분위별 가구소득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소득세가 있는 사회라면 당연히 나타날 만한 수준에서 세후소득인 처분가능소득 비중이 미미하게 상승,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힘들었다. 경상소득의 경우, 전체 가구 평균소득 대비 1분위 가구 비중은 1.50%p(18.00→19.50%) 늘어났지만, 소득 최상위 5분위 가구 또한 0.81%p(233.88→234.70%) 상승했고, 2분위(-1.39%p) · 3분위(-0.67%p) · 4분위(-0.22%p) 가구 모두 비중이 하락했다. 처분가능소득의 경우, 평균 가구소득 대비 5분위 소득 비중은 -6.50%p(231.78→225.28%) 하락하고, 1분위(2.16%p) · 2분위(0.59%p) · 3분위(1.96%p) · 4분위(1.82%p) 가구 모두 소득 비중이 상승했지만,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총자산 순증액은 5분위 가구가 34,825만원(63,229→98,05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분위 20,329만원, 3분위 16,219만원, 2분위 10,434만원, 1분위 2,491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5분위 가구 대비 1분위 가구의 총자산 비중은 17.62%에서 13.90%로 -3.72%p나 감소하면서,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 간의 자산 격차 또한 2010년 52,090만원에서 2020년 84,425만원으로 확대되었고, 2~4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 간의 자산 격차 또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2017년 이후 자산 격차가 급등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 가격 상승이 자산 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 실물자산 비중은 76.42%였는데, 소득 5분위 중 실물자산 비중은 1분위(78.40%) 가구가 가장 높았고, 2분위(77.43%), 4분위(76.42%), 5분위(76.04%), 3분위(75.97%) 등으로, 큰 편차는 없었다. 1, 2분위 가구 즉 저소득 가구의 실물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는데, 기본적으로 소득액이 적기 때문에 저축이나 금융투자 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소득 상위 분위일수록 자산과 부채가 많았고,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부채 순증액도 많았다. 5분위 가구 부채 순증액은 7,133만원(11,512→18,64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분위 5,188만원, 3분위 3,491만원, 2분위 1,835만원, 1분위 542만원 등이었다.

한편 1분위 가구는 부채증가율이 가장 낮았음에도, 부채보유 가구 비중 증가율은 9.87%로 가장 높았는데, 1분위가 적자 가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테크용 대출이 아니라 가정 경제 유

지에 필수적인 생계비 대출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추정된다.

소득 분위별 가구 모두 부채증가율도 높았지만, 원리금상환액 증가율은 1분위 253.85%(69→242만원), 2분위 106.18%(264→545만원), 3분위 173.76%(381→1,044만원), 4분위 163.20%(622→1,636만원), 5분위 117.32%(1,136→2,468만원) 등으로 부채증가율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 가계 원리금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소비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가구 평균부채 대비 1분위 가구 부채 비중은 2010년 26.19%에서 2020년 21.23%로 -4.96%p 줄었음에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13.9%에서 20.4%로 6.5%p 상승했는데, 이는 1분위 가구가 자산 담보력도 부족하고 소득도 적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아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가 높게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순자산 순증액은 5분위 가구가 27,692만원(51,717→79,40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분위 15,141만원(24,306→39,447만원), 3분위 12,728만원(16,497→29,225만원), 2분위 8,599만원(12,868→21,467만원), 1분위 1,948만원(9,929→11,877만원) 등이었다. 전체 가구 평균 순자산 대비 1분위 가구 순자산 비중을 보면, 2010년 43.0%에서 2020년 32.7%로 10.3%p나 감소했는데, 이는 가구소득이 적어 필수적인 지출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재정 적자상태이기 때문이었다.

2020년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보면, 3분위 가구가 173.77%로 가장 높았고, 1분위(173.74%), 5분위(171.77%), 2분위(171.24%), 4분위(168.60%) 가구의 순이었다. 한편 기준연도인 2010년에는 4분위 가구가 129.86%로 가장 낮았고, 1분위 가구가 211.39%로 소득 분위 간 편차가 컸지만, 2020년에는 4분위 가구가 168.60%로 가장 낮았고 최고 비율 또한 3분위 가구 173.77%로 소득 분위 간 편차가 거의 없이 170%대로 수렴되고 있는 양상이었다.

이번 보고서는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분석했는데, 주요 분석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최하위 20% 가구인 1분위의 경우 2012년 이후 2020년 현재까지 소득보다 필수 경비지출이 더 많아 적자재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저소득 가구 집단인 1분위와 2분위 가구의 경우 주거비, 의료비 등 필수 경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으며, 특히 1분위 가구는 식료품비, 통신비, 교통비 등의 지출 또한 급증하고 있었다. 기본권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회 복지정책이 구축될 필요가 있었다.



셋째, 소득 5분위 가구 간 교육비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학력별 소득 격차가 극심하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의 소득 불평등이 미래 세대에도 그대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았다. 소득 불평등을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무상 교육 등 공교육 체계를 대학까지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소득 재분배 관련 정책(소득세제 및 정부 지원금 등) 효과가 매우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련 정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대대적인 수술로 저소득 가구의 의료, 주거, 식품 등 기본권적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 1. 들어가며

본 보고서는 통계청,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동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 우리나라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가 지난 11년간(2010~2020년)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분석한 것이다. 1차 보고서 ‘전체 가구소득 및 재무구조 변화 총괄’은 전체 가구소득 및 재무 항목들의 평균과 중앙값을 활용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2차 보고서는 ‘가구주 성별 & 종사상 지위별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분석하였고, 3차 보고서는 ‘가구주 교육 정도 & 연령대별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분석하였다. 3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주가 대졸 이상인 가구와 고졸인 가구 간 소득 및 자산 격차가 2016년 이후 급격하게 커지고 있었으며,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더 심각한 상태였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경상소득 순증액은 대졸 가구가 2,877만원으로 고졸 가구 1,780만원보다 많았고, 대졸과 고졸 가구 간 경상소득 격차도 1,828만원에서 2020년 2,926만원으로 늘어났다. 총자산 증가율도 대졸 가구가 64.23%로 고졸 가구 49.75%보다 높아, 두 가구 간 자산 격차 또한 16,143만원에서 30,001만원으로 확대되었다. 대졸과 고졸 가구 간 소득 격차는 1.6배 늘었는데, 자산 격차는 1.86배가 늘어, 상대적으로 자산 불평등이 더 심해졌다.

둘째, 가구주 학력 및 연령대별 자산 불평등이 커지고 있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부채 레버리지를 활용한 재테크와 2016년 이후 주택 가격의 급등’이었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부채 순증액은 대졸 가구가 5,981만원으로 고졸 가구 2,660만원보다 많았고, KB주택가격동향에 의하면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은 2016년 이후 급등세를 연출하였다.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고려하면, 실물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더 많은 부채를 동원할 수 있었던 가구 집단이 재산 증식에 유리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대졸 가구 실물자산 순증액(&증가율)은 18,764만원(61.09%)으로 고졸 가구 8,883만원(46.76%)보다 많았다. 그 결과 순자산 순증액도 대졸 가구가 19,875만원으로 고졸 가구 9,339만원보다 많았다.

총자산 순증액과 증가율이 모두 높았던 40대와 30대 가구의 공통된 특징 또한 ‘부채증가율과 순증액 모두 40대(101.33%, 5,701만원)와 30대(153.25%, 6,101만원)가 다른 연령대 가구보다 많았으며’, ‘실물자산 증가율과 순증액도 40대(66.87%, 14,447만원)와 30대(77.89%, 10,374만원)가 다른 연령대보다 많았다는’ 것이었다.

셋째, 가구분포가 급감하고 있는 20대 가구의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는 ‘N포세대’의 특징

을 잘 반영하고 있었다.

분석 기간 중 20대 가구 경상소득 연평균증가율(&순증액)은 2.85%(826만원)로 30대(4.27%, 2,162만원), 40대(4.86%, 2,870만원), 50대(5.05%, 2,904만원), 60대(6.54%, 1,853만원) 가구 등과 비교할 때 가장 낮았다.

2020년 기준 20대 가구 저축가능액으로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모으기 위해서는 94.9년이 소요되는 등 사실상 자기 주택 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1인당 소비지출액 또한 2020년 1,212만원으로 연령대별 가구 집단 중 가장 많았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내 집 마련을 포기하면서 소비지출도 급등세를 보였다.

넷째,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위험 수위에 도달한 가구의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채무상환 여력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정부의 가계부채 대응 기조는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택 가격 급등에 따라 자산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부동산 가격 하락 시 현실 경제가 받게 될 충격을 고려한다면, 부동산 시장으로 향하는 다주택자 재테크용 자금을 적극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지난 3차 보고서는 2차 보고서에 이어 가구주 특성별(교육 정도 및 연령대)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분석했는데, 이번 보고서는 가구 특성 중 소득 5분위 가구 집단별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분석할 예정이다.

- 가계금융복지조사(2010~2020) 분석보고서 이용 시 유의할 점 -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 단위는 경제적 가족<sup>1)</sup>으로 ‘가계동향조사’의 가구 단위<sup>2)</sup>와는 조사 및 분석단위가 다르다. 가계금융조사(2010~2011년)의 표본은 1만 가구였으며, 2012년 이후의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표본의 2만 가구이다. 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까지 포함하여 산출한 전체 가구 통계와 보유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보유 가구 통계가 있다.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각 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과 그 총계가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을 수 있다. 부동산 평가 방법은 조사기준 당시의 시가(시장가격)로 조사되었다. 2018년부터 소득 및 처분가능소득, 비소비지출은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의 행정자료와 면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새롭게 작성되었다.

본 보고서에 사용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가구소득 및 재무(자산&부채) 관련 모든 시계열 자료는 저자가 매년 발표되는 통계청 보고서와 통계표를 가지고 복원한 자료이다. 통계청 홈페이지의 경우 관련 통계는 가계금융조사(2010~2011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년 이후)로 시계열이 구축되어 제공되고 있다. 조사항목이나 방법의 변화에 따라 시계열이 구축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나, 본 보고서에서는 동일 목적으로 조사된 동일 조사항목의 경우 2010년부터 2020년간의 시계열 분석을 수행함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모든 연도는 기본적으로 조사연도를 의미한다. 실제 통계에서의 자산 및 부채 관련 항목들은 각 조사연도 3월말 기준(2010년만 2월말 기준) 자료이며, 소득 관련 항목들은 조사 전년도 기준 자료이다. 예를 들어 2020년으로 표기된 각 소득 및 지출 관련 데이터는 2019년 소득 및 지출(2019년 1월~12월)을 의미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 중 일부는 2012년부터 제공되고 있어, 해당 항목의 경우 본 보고서 또한 2012년 이후로 시계열 분석하였다. 2012년부터 제공되고 있는 주요 데이터로는 '소득원천별 가구소득,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비목별 소비지출 내역, 비목별 비소비지출 내역' 등이 있다.

- 1) 1인 가구 및 혈연, 결혼, 입양 등으로 맺어져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을 의미. 취업이나 학업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외지에 거주하는 가족은 포함. 함께 살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친인척, 동거인이나 시설에 장기간(12개월 이상) 거주하는 가족은 제외함.
- 2) 취업, 학업, 의무복무 등으로 일시적으로 외지에 거주하는 가족은 제외하고, 생계를 함께 하는 비혈연 동거가구원은 포함

## 2. 소득 5분위별 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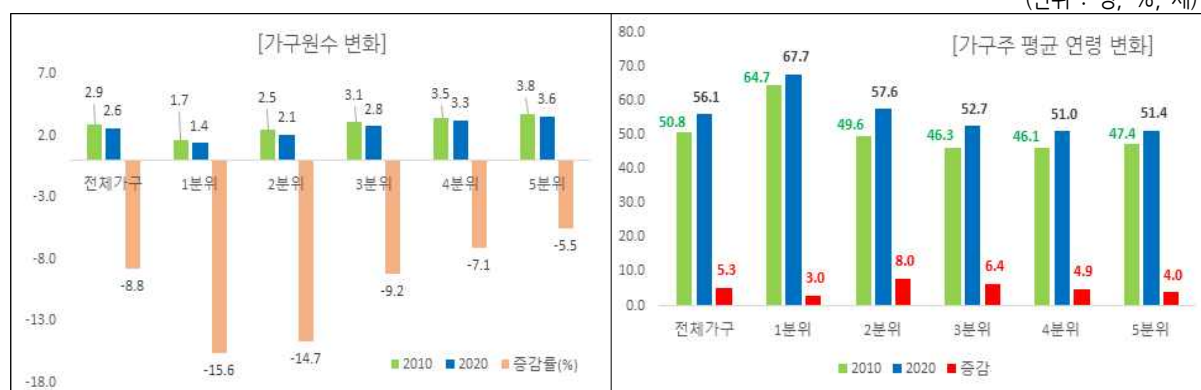
### 1) 가구소득 및 지출 관련 변화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소득 5분위<sup>4)</sup> 가구별 가구원 수 변화를 보면, 소득이 적을수록 가구원 수가 더 많이 줄었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 수는 더 많았다. 1분위 가구원 수 감소율은 -15.6%에 달했으며, 2020년 기준 5분위 가구 평균 가구원 수는 3.6명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1분위 가구원 수는 2010년 1.7명에서 2020년 1.4명으로 -15.6% 감소했으며, 2분위 -14.7%(2.5→2.1명), 3분위 -9.2%(3.1→2.8명), 4분위 -7.1%(3.5→3.3명), 5분위 -5.5%(3.8→3.6명) 등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평균 연령은 대개 소득이 적을수록 많았는데, 2020년 기준 1분위 가구주 평균 연령은 67.7세로 가장 많았고, 2분위(57.6세), 3분위(52.7세)가 그 뒤를 이었고, 5분위 가구는 51.4세로 4분위(51.0세)보다 0.4세가 더 많았다.

[그림1] 소득 5분위별 가구원 수 및 가구주 평균 연령 변화

(단위 : 명, %, 세)



자료) 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2020년 기준 소득 5분위별 경상소득은 5분위 가구 13,903만원, 4분위 7,126만원, 3분위 4,671만원, 2분위 2,763만원, 1분위 1,155만원 등으로, 5분위 경상소득은 1분위 경상소득의 12배에 달했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경상소득 증가율은 1분위 가구가 70.12%로 가장 높았고, 뒤를

3) 본 보고서에서 별도 표기가 없는 한 소득 및 지출, 자산 및 부채 관련 수치는 모두 해당 가구 집단별 평균값이다. 증감값을 사용한 경우 별도로 증감값임을 표기하였다.

4) 소득 5분위는 국민의 소득을 5구간으로 나누어 분류한 계층별 분류다. 5분위는 최상위 20%, 4분위는 소득 상위 60~80%, 3분위는 소득 상위 40~60%, 2분위는 소득 하위 20~40%, 1분위는 최하위 20%를 나타낸다.

이어 5분위(57.56%), 4분위(56.72%), 3분위(55.69%), 2분위(52.45%)의 순이었다. 소득 순증액은 5분위 가구가 5,079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분위(2,579만원), 3분위(1,671만원), 2분위(951만원), 1분위(476만원) 등이었다. 소득증가율은 1분위 가구가 가장 높았지만, 1분위 가구 소득 순증액(476만원)은 5분위 가구 순증액(5,079만원)의 9.4%에 불과했다.

[표1] 소득 5분위별 경상소득 및 증가율 추이

(단위 : 만원, %)

| 구 분  | 1분위   |       | 2분위   |      | 3분위   |      | 4분위   |       | 5분위    |       |
|------|-------|-------|-------|------|-------|------|-------|-------|--------|-------|
|      | 경상소득  | 증가율   | 경상소득  | 증가율  | 경상소득  | 증가율  | 경상소득  | 증가율   | 경상소득   | 증가율   |
| 2010 | 679   | -     | 1,812 | -    | 3,000 | -    | 4,547 | -     | 8,824  | -     |
| 2011 | 630   | -7.20 | 1,826 | 0.78 | 3,113 | 3.76 | 4,783 | 5.18  | 9,703  | 9.96  |
| 2012 | 761   | 20.74 | 1,991 | 9.01 | 3,344 | 7.42 | 5,040 | 5.38  | 10,029 | 3.36  |
| 2013 | 814   | 6.96  | 2,179 | 9.44 | 3,589 | 7.33 | 5,389 | 6.92  | 10,420 | 3.90  |
| 2014 | 827   | 1.60  | 2,299 | 5.51 | 3,794 | 5.71 | 5,635 | 4.56  | 10,735 | 3.02  |
| 2015 | 864   | 4.47  | 2,355 | 2.44 | 3,896 | 2.69 | 5,792 | 2.79  | 10,938 | 1.89  |
| 2016 | 891   | 3.13  | 2,412 | 2.42 | 3,993 | 2.49 | 5,958 | 2.87  | 11,153 | 1.97  |
| 2017 | 1,001 | 12.35 | 2,556 | 5.97 | 4,323 | 8.26 | 6,590 | 10.61 | 12,921 | 15.85 |
| 2018 | 1,057 | 5.59  | 2,657 | 3.95 | 4,464 | 3.26 | 6,825 | 3.57  | 13,520 | 4.64  |
| 2019 | 1,104 | 4.45  | 2,725 | 2.56 | 4,577 | 2.53 | 6,977 | 2.23  | 13,754 | 1.73  |
| 2020 | 1,155 | 4.66  | 2,763 | 1.39 | 4,671 | 2.05 | 7,126 | 2.13  | 13,903 | 1.09  |
| 증감액  | 476   |       | 951   |      | 1,671 |      | 2,579 |       | 5,079  |       |
| 증가율  | 70.12 |       | 52.45 |      | 55.69 |      | 56.72 |       | 57.56  |       |

자료) 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비소비지출<sup>5)</sup> 추이를 보면, 5분위 가구 비소비지출은 1,761만원에서 3,049만원으로 1,287만원이 늘어나 73.09%의 증가율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4분위 349만원(861→1,209만원, 40.50%), 3분위 162만원(567→728만원, 28.54%), 2분위 62만원(332→394만원, 18.67%), 1분위 40만원(107→147만원, 37.19%) 등이었다.

[표2] 소득 5분위별 비소비지출<sup>6)</sup> 및 증가율 추이

(단위 : 만원, %)

| 구 분  | 1분위 |     | 2분위 |     | 3분위 |     | 4분위 |     | 5분위   |     |
|------|-----|-----|-----|-----|-----|-----|-----|-----|-------|-----|
|      | 지출액 | 증가율 | 지출액 | 증가율 | 지출액 | 증가율 | 지출액 | 증가율 | 지출액   | 증가율 |
| 2010 | 107 | -   | 332 | -   | 567 | -   | 861 | -   | 1,761 | -   |

5)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 · 사회보험료, 가구 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 이전지출, 이자 비용 등(가계금융복지조사 항목분류 체계 중)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      |       |        |       |       |       |       |       |       |       |       |
|------|-------|--------|-------|-------|-------|-------|-------|-------|-------|-------|
| 2011 | 114   | 6.17   | 301   | -9.48 | 556   | -1.80 | 874   | 1.57  | 1,799 | 2.12  |
| 2012 | 78    | -31.34 | 287   | -4.56 | 539   | -3.13 | 867   | -0.83 | 2,016 | 12.08 |
| 2013 | 101   | 29.49  | 365   | 27.18 | 614   | 13.91 | 983   | 13.38 | 2,077 | 3.03  |
| 2014 | 105   | 3.96   | 348   | -4.66 | 634   | 3.26  | 1,005 | 2.24  | 2,104 | 1.30  |
| 2015 | 99    | -5.71  | 356   | 2.30  | 634   | -     | 1,013 | 0.80  | 2,112 | 0.38  |
| 2016 | 95    | -4.04  | 348   | -2.25 | 646   | 1.89  | 1,029 | 1.58  | 2,184 | 3.41  |
| 2017 | 133   | 40.00  | 373   | 7.18  | 674   | 4.33  | 1,030 | 0.10  | 2,582 | 18.22 |
| 2018 | 140   | 5.26   | 382   | 2.41  | 704   | 4.45  | 1,116 | 8.35  | 2,827 | 9.49  |
| 2019 | 146   | 4.29   | 409   | 7.07  | 727   | 3.27  | 1,184 | 6.09  | 3,025 | 7.00  |
| 2020 | 147   | 0.54   | 394   | -3.61 | 728   | 0.18  | 1,209 | 2.14  | 3,049 | 0.78  |
| 증감액  | 40    |        | 62    |       | 162   |       | 349   |       | 1,287 |       |
| 증가율  | 37.19 |        | 18.67 |       | 28.54 |       | 40.50 |       | 73.09 |       |

자료) 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소득 최상위 20% 가구 집단인 5분위의 비소비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결과, 처분가능 소득증가율은 5분위 가구가 53.69%로 가장 낮았으며, 1분위 가구는 76.27%로 가장 높았다. 2분위(60.04%), 3분위(62.01%), 4분위(60.51%) 등은 큰 차이가 없었다.

처분가능소득 순증액은 5분위 가구 3,792만원(7,063→10,855만원), 4분위 2,230만원(3,686→5,916만원), 3분위 1,509만원(2,434→3,942만원), 2분위 889만원(1,480→2,369만원), 1분위 436만원(572→1,009만원) 가구의 순이었다.

5분위 가구를 제외하고, 소득 1~4분위 가구의 경우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경상소득증가율보다 처분가능소득증가율이 높게 나타나 세후 소득개선 효과가 미미하지만 나타났다. 하지만 비소비지출에 공적연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고소득 가구의 경우 현재의 높은 비소비지출 중 일부는 미래 연금소득이나 실업 급여 등으로 되돌려 받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로는 소득 불평등 해소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3] 소득 5분위별 처분가능소득 및 증가율 추이

(단위 : 만원, %)

| 구 분  | 1분위        |       | 2분위        |       | 3분위        |      | 4분위        |      | 5분위        |       |
|------|------------|-------|------------|-------|------------|------|------------|------|------------|-------|
|      | 처분가<br>능소득 | 증가율   | 처분가<br>능소득 | 증가율   | 처분가<br>능소득 | 증가율  | 처분가<br>능소득 | 증가율  | 처분가<br>능소득 | 증가율   |
| 2010 | 572        | -     | 1,480      | -     | 2,434      | -    | 3,686      | -    | 7,063      | -     |
| 2011 | 517        | -9.70 | 1,526      | 3.09  | 2,557      | 5.05 | 3,908      | 6.03 | 7,904      | 11.91 |
| 2012 | 683        | 32.19 | 1,705      | 11.75 | 2,805      | 9.72 | 4,173      | 6.78 | 8,014      | 1.39  |

6) 비소비지출 구성비(조사연도 2020 기준) : 세금(32.2%), 공적연금·사회보험료(31.9%), 가구 간 이전지출(13.2%), 비영리단체로 이전(5.0%), 이자 비용(17.7%) 등

|      |       |      |       |      |       |      |       |       |        |       |
|------|-------|------|-------|------|-------|------|-------|-------|--------|-------|
| 2013 | 713   | 4.39 | 1,814 | 6.39 | 2,975 | 6.06 | 4,406 | 5.58  | 8,343  | 4.11  |
| 2014 | 721   | 1.12 | 1,951 | 7.55 | 3,160 | 6.22 | 4,630 | 5.08  | 8,632  | 3.46  |
| 2015 | 765   | 6.10 | 1,999 | 2.46 | 3,262 | 3.23 | 4,778 | 3.20  | 8,826  | 2.25  |
| 2016 | 796   | 4.05 | 2,064 | 3.25 | 3,347 | 2.61 | 4,929 | 3.16  | 8,969  | 1.62  |
| 2017 | 867   | 8.92 | 2,183 | 5.77 | 3,650 | 9.05 | 5,560 | 12.80 | 10,339 | 15.27 |
| 2018 | 918   | 5.88 | 2,275 | 4.21 | 3,760 | 3.01 | 5,709 | 2.68  | 10,692 | 3.41  |
| 2019 | 958   | 4.36 | 2,316 | 1.80 | 3,850 | 2.39 | 5,792 | 1.45  | 10,728 | 0.34  |
| 2020 | 1,009 | 5.29 | 2,369 | 2.27 | 3,942 | 2.40 | 5,916 | 2.15  | 10,855 | 1.18  |
| 증감액  | 436   |      | 889   |      | 1,509 |      | 2,230 |       | 3,792  |       |
| 증가율  | 76.27 |      | 60.04 |      | 62.01 |      | 60.51 |       | 53.69  |       |

자료) 가계금융조사와(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소득 5분위 가구 집단 간 소득 격차 추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소득 5분위 가구 대비 분위별 소득 비중을 산출하였다. 5분위 가구 대비 경상소득 비중을 보면 1분위 가구를 제외하고, 2~4분위 가구 모두 기준연도인 2010년도에 비해 비중이 줄어들어 세전소득 격차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5분위 가구 경상소득 대비 2분위 경상소득 비중은 2010년 20.54%에서 2020년 19.87%로 -0.67%p 감소했고, 3분위 가구는 34.0%에서 33.59%로 -0.40%p 하락했으며, 4분위 가구 또한 51.53%에서 51.25%로 -0.27%p 줄었다. 1분위 가구만 유일하게 7.70%에서 8.31%로 0.61%p 상승했다.

5분위 가구 대비 처분가능소득 비중은 1~4분위 가구 모두 2010년과 비교할 때 늘었다. 비중 증가 폭은 4분위(2.32%p), 1분위(1.19%p), 3분위(1.86%p), 2분위(0.87%p) 등으로, 미미하긴 하지만 세후소득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표4] 5분위 가구 대비 분위별 소득 비중 추이

(단위 : %, %p)

| 구 분  | 경상소득 비중 |       |       |       | 처분가능소득 비중 |       |       |       |
|------|---------|-------|-------|-------|-----------|-------|-------|-------|
|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 2010 | 7.70    | 20.54 | 34.00 | 51.53 | 8.10      | 20.95 | 34.46 | 52.19 |
| 2011 | 6.50    | 18.82 | 32.08 | 49.29 | 6.54      | 19.30 | 32.34 | 49.44 |
| 2012 | 7.59    | 19.85 | 33.34 | 50.25 | 8.52      | 21.28 | 35.00 | 52.07 |
| 2013 | 7.81    | 20.91 | 34.44 | 51.72 | 8.55      | 21.74 | 35.66 | 52.81 |
| 2014 | 7.70    | 21.42 | 35.34 | 52.49 | 8.35      | 22.60 | 36.61 | 53.64 |
| 2015 | 7.90    | 21.53 | 35.62 | 52.95 | 8.67      | 22.65 | 36.96 | 54.14 |
| 2016 | 7.99    | 21.63 | 35.80 | 53.42 | 8.88      | 23.01 | 37.32 | 54.96 |
| 2017 | 7.75    | 19.78 | 33.46 | 51.00 | 8.39      | 21.11 | 35.30 | 53.78 |
| 2018 | 7.82    | 19.65 | 33.02 | 50.48 | 8.59      | 21.28 | 35.17 | 53.40 |
| 2019 | 8.03    | 19.81 | 33.28 | 50.73 | 8.93      | 21.59 | 35.89 | 53.99 |



##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      |      |       |       |       |       |       |       |       |
|------|------|-------|-------|-------|-------|-------|-------|-------|
| 2020 | 8.31 | 19.87 | 33.59 | 51.25 | 9.29  | 21.82 | 36.32 | 54.51 |
| 증감   | 0.61 | -0.67 | -0.40 | -0.27 | 1.19  | 0.87  | 1.86  | 2.32  |
| 증가율  | 7.97 | -3.24 | -1.19 | -0.53 | 14.70 | 4.13  | 5.41  | 4.44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아래 [그림2]는 소득 최상위 5분위 가구 대비 최하위 가구인 1분위 가구와 차상위 가구인 4분위 소득 비중을 산출한 것이다. 먼저 1분위 가구를 살펴보면, 경상소득 비중은 2010년 7.70%에서 2020년 8.31%로 0.61%p 늘어났고, 처분가능소득 비중은 8.10%에서 9.29%로 1.19%p 상승했다. 처분가능소득 상승 폭이 경상소득 상승 폭을 상회, 세후소득인 처분가능소득이 더 많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4분위 가구의 경우 경상소득 비중은 2010년 51.53%에서 2020년 51.25%로 -0.28%p 줄었고, 처분가능소득 비중은 52.19%에서 54.51%로 2.32%p가 늘어났다. 5분위 소득 대비 경상소득 비중은 줄었지만, 세후소득인 처분가능소득 비중은 늘어남으로써 세후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그림2] 소득 5분위 가구소득 대비 1, 4분위 가구소득 비중 추이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세후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1분위와 4분위 가구 모두 나타났지만, 2012년 이후의 세전소득 비중과 세후소득 비중과의 격차 추이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1분위 가구의 경우 비중 차 (세후소득 비중 - 세전소득 비중)는 2012년 0.93%p에서 2020년 0.98%p로 소폭 오르긴 했지만,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등락을 보인 것이었다. 반면 4분위 가구 세후·세전소득 비중 차는 2012년 1.82%p에서 2020년 3.25%p까지 추세적인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2013년 이후에는 1.09%p에서 2020년 3.25%p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양상이었다.

소득 5분위 가구 대비 1, 4분위 가구소득 비중 및 비중 차 추이는, 세후 소득분배 개선 효

과가 저소득 가구인 1분위보다는 차상위 가구인 4분위에서 나아가 2017년 이후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3] 5분위 가구와 1, 4분위 가구 간 소득 격차 추이

(단위 : 만원)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소득 격차는 상위 분위 소득에서 하위 분위 소득을 차감한 값을 의미

소득 최상위 5분위 가구와 1, 4분위 가구 간의 소득 격차 추이를 보면, 5분위와 1분위 간에는 소득 격차가 지속하여 확대되고 있었지만, 5분위와 4분위 가구 간 소득 격차는 세전소득은 정체되고 세후소득 격차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먼저 5분위와 1분위 가구 간 2017년 이후 소득 격차 추이를 보면, 경상소득 격차는 (11,920 → 12,463 → 12,650 → 12,748만원)으로, 처분가능소득 격차는 (9,472 → 9,774 → 9,770 → 9,846만원)으로, 세전소득은 물론 세후소득 모두 소득 격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5분위와 4분위 가구 간 2017년 이후 소득 격차 추이를 보면, 경상소득 격차는 (6,331 → 6,695 → 6,777 → 6,777만원)으로 정체되고 있었으며, 처분가능소득 격차는 (4,779 → 4,983 → 4,936 → 4,938만원)으로 줄어들고 있었다.

소득 5분위 가구 대비 1분위나 4분위 가구 간에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양상들은, 소득세제 및 공적 지원금 등의 현행 정책들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불평등 개선에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소득 5분위 가구별 비목별 소비지출 추이를 보면, 소비지출증가율은 1분위(41.13%), 2분위(25.34%), 3분위(20.39%), 4분위(19.45%), 5분위(11.17%) 등으로 소득이 적은 분위일수록 소비지출증가율은 더 높았다.

소비지출 순증액은 4분위 가구가 551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5분위(482만원), 3분위(441

만원), 2분위(369만원), 1분위(306만원) 등이었다.

소득 5분위별 가구 집단 모두 식료품과 주거비, 의료비 지출은 증가했고, 교육비 지출은 감소했다. 저소득 가구 집단인 1, 2분위의 경우 교통비 지출이 늘었지만, 고소득 가구 집단인 4, 5분위 가구의 교통비 지출은 줄었다.

소득 최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경우 식료품비 순증액이 11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비(52만원), 주거비(45만원), 교통비(17만원), 통신비(11만원) 등은 증가했으며, 교육비는 -9만원으로 줄었다.

소득 최상위 20%인 5분위 가구 또한 식료품비 순증액이 24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비(31만원), 주거비(6만원), 통신비(3만원) 등은 늘었났고, 교육비는 -71만원, 교통비는 -53만원 등 크게 줄었다.

5분위 가구와 비교할 때 1분위 가구의 식료품비, 주거비 및 의료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주거비와 의료비는 순증액 또한 1분위 가구가 더 많았다.

[표5] 소득 5분위별 비목별 소비지출 추이

(단위 : 만원, %)

| 구 분 |      | 소비계   | 식료품   | 주거비 <sup>가)</sup> | 교육비    | 의료비   | 교통비   | 통신비    | 기타지출  |
|-----|------|-------|-------|-------------------|--------|-------|-------|--------|-------|
| 1분위 | 2012 | 744   | 253   | 164               | 31     | 82    | 56    | 49     | 110   |
|     | 2020 | 1,050 | 364   | 209               | 22     | 134   | 73    | 60     | 188   |
|     | 증감   | 306   | 111   | 45                | -9     | 52    | 17    | 11     | 78    |
|     | 증가율  | 41.13 | 43.87 | 27.44             | -29.03 | 63.41 | 30.36 | 22.45  | 70.91 |
| 2분위 | 2012 | 1,456 | 454   | 256               | 117    | 98    | 160   | 116    | 255   |
|     | 2020 | 1,825 | 591   | 293               | 93     | 162   | 171   | 119    | 396   |
|     | 증감   | 369   | 137   | 37                | -24    | 64    | 11    | 3      | 141   |
|     | 증가율  | 25.34 | 30.18 | 14.45             | -20.51 | 65.31 | 6.88  | 2.59   | 55.29 |
| 3분위 | 2012 | 2,163 | 622   | 303               | 277    | 118   | 269   | 177    | 397   |
|     | 2020 | 2,604 | 807   | 332               | 239    | 166   | 269   | 176    | 616   |
|     | 증감   | 441   | 185   | 29                | -38    | 48    | -     | -1     | 219   |
|     | 증가율  | 20.39 | 29.74 | 9.57              | -13.72 | 40.68 | -     | - 0.56 | 55.16 |
| 4분위 | 2012 | 2,833 | 769   | 322               | 458    | 143   | 364   | 211    | 567   |
|     | 2020 | 3,384 | 1,000 | 354               | 422    | 209   | 337   | 216    | 845   |
|     | 증감   | 551   | 231   | 32                | -36    | 66    | -27   | 5      | 278   |
|     | 증가율  | 19.45 | 30.04 | 9.94              | -7.86  | 46.15 | -7.42 | 2.37   | 49.03 |
| 5분위 | 2012 | 4,316 | 1,092 | 416               | 862    | 219   | 488   | 254    | 984   |
|     | 2020 | 4,798 | 1,336 | 422               | 791    | 250   | 435   | 257    | 1,30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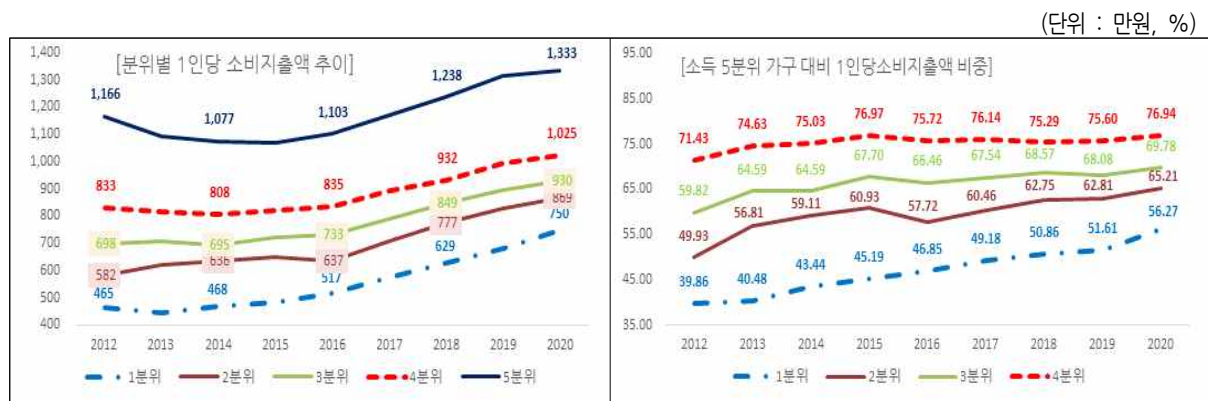
|  |     |       |       |      |       |       |        |      |       |
|--|-----|-------|-------|------|-------|-------|--------|------|-------|
|  | 증감  | 482   | 244   | 6    | -71   | 31    | -53    | 3    | 324   |
|  | 증가율 | 11.17 | 22.34 | 1.44 | -8.24 | 14.16 | -10.86 | 1.18 | 32.93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각 년도 소득 분위별 소비지출액을 분위별 평균 가구원 수로 나누어 산출한 1인당 소비지출액 추이를 보면, 가구당 소비지출액 추이와 같이 소득이 적은 분위일수록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1분위 가구 1인당 소비지출액은 2012년 465만원에서 2020년 750만원으로 285만원이 늘어나 61.29%의 증가율을 보였다. 2분위는 49.22%(582→869만원), 3분위는 33.29%(698→930만원), 4분위는 23.07%(833→1,025만원) 증가했다. 5분위 가구 1인당 소비지출액은 1,166만원에서 1,333만원으로 166만원이 늘어나 14.26%의 증가율로 가장 적게 늘어났다.

5분위 가구의 1인당 소비지출액 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결과, 5분위 가구 대비 분위별 1인당 소비지출액 비중은 기준연도인 2012년에 비해 모두 늘어났다. 특히 1분위 가구 1인당 소비지출액 비중은 2012년 39.86%에서 2020년 56.27%로 가장 많이 늘어났다. 2012년 4분위(71.43%)와 1분위(39.86%) 가구 간의 비중 차는 31.57%p에 달했었지만, 2020년 20.67%p로 크게 줄어들었다. 1분위 가구의 경우 다른 소득 분위와 비교할 때, 소득증가 대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소비지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4] 소득 5분위별 1인당 소비지출액 및 5분위 가구 대비 비중 추이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1인당 소비지출액 = 각년도 소득 분위별 소비지출액 / 각년도 소득 분위별 가구원 수

2020년 기준 식료품비 지출은 5분위(1,336만원), 4분위(1,000만원), 3분위(807만원), 2분위(591만원), 1분위(364만원) 등으로 분위 간 편차가 매우 큰 것처럼 보이지만, 1인당 식료품비를 산출해보면, 5분위(371만원), 4분위(303만원), 3분위(288만원), 2분위(281만원), 1분위(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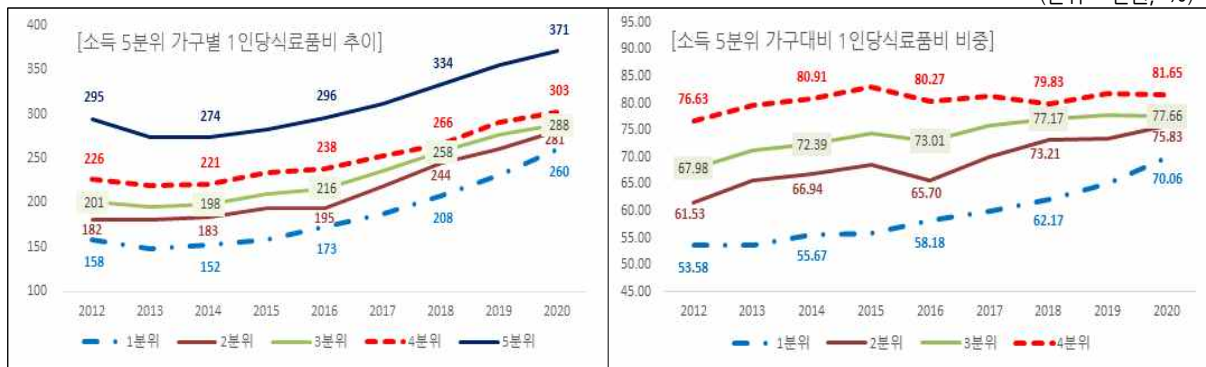
7) 주거비 : 월세(연간), 주택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연료비 등

##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만원) 등으로 분위 간 편차가 크게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5분위 이외의 소득 분위 간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5] 소득 5분위별 1인당 식료품비, 5분위 가구 대비 비중

(단위 :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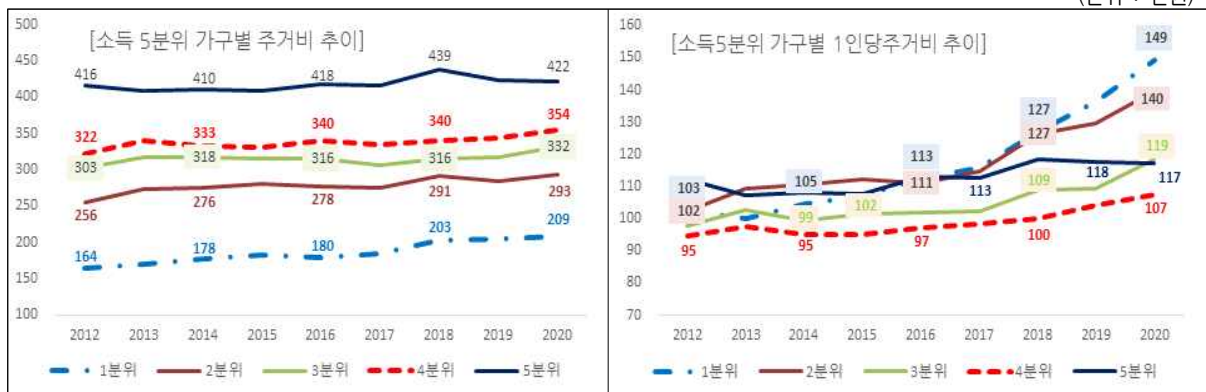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1인당 식료품비 = 각년도 소득 분위별 식료품비 / 각년도 소득 분위별 가구원 수

5분위 가구 대비 1분위 가구의 1인당 식료품비 비중을 보면, 2012년 53.58%에서 2020년 70.06%로 16.48%p나 상승했다. 2분위는 14.30%p(61.53→75.83%), 3분위는 9.68%p(67.98→77.66%), 4분위는 5.02%p(76.63→81.65%) 등으로 모두 비중이 늘었는데, 소득 하위 분위 일수록 증가 폭이 더 컸다.

[그림6] 소득 5분위별 주거비 및 1인당 주거비 추이

(단위 : 만원)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1인당 주거비 = 각년도 소득 분위별 주거비 / 각년도 소득 분위별 가구원 수

월세, 주택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연료비 등을 포괄하는 주거비의 경우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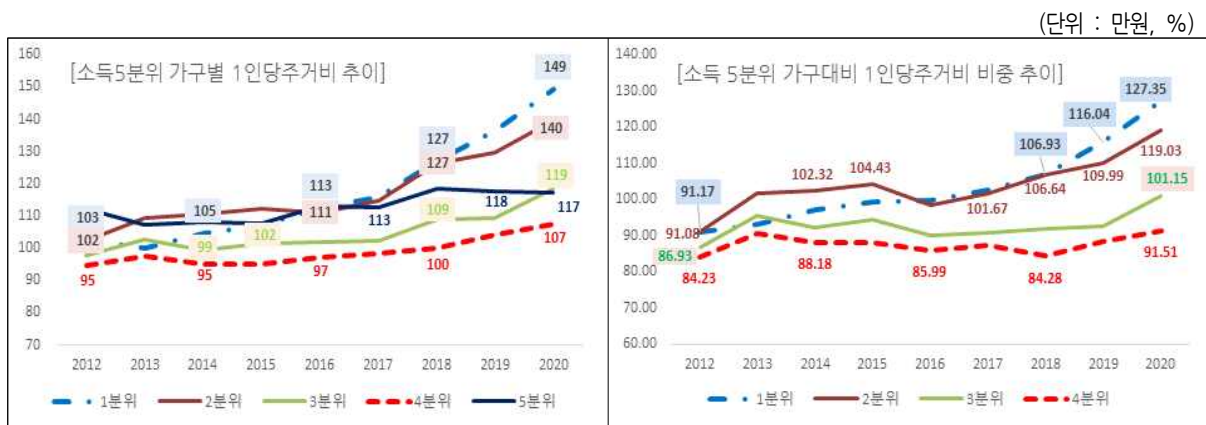


가율은 물론 순증액 또한 소득 하위 분위로 갈수록 높게 나타났다. 5분위 가구 주거비는 2012년 416만원에서 2020년 422만원으로 6만원이 늘어 증가율은 1.44%에 불과했지만, 1분위 가구 주거비는 164만원에서 209만원으로 45만원이 늘어나 27.44%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주거비는 5분위(422만원), 4분위(354만원), 3분위(332만원), 2분위(293만원), 1분위(209만원) 등으로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주거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1인당 주거비를 산출하면, 소득 최하위 가구 집단인 1분위가 14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분위(140만원), 3분위(119만원), 5분위(117만원), 4분위(107만원) 등이었다.

소득 5분위별 1인당 주거비 추이를 보면, 2017년 이후로 소득 하위 가구 집단인 1, 2분위 가구의 주거비가 급등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2016년을 기점으로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주택가격 상승이 소득 하위 가구 집단의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5분위 가구 대비 1분위 가구의 1인당 주거비 비중 추이를 보면, 2012년 91.17%에서 2017년 102.59%로 5분위 가구 1인당 주거비를 능가한 이후, 2020년 127.35%까지 비중이 급등하는 등, 1분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소득 5분위별 1인당 주거비 및 5분위 가구 대비 비중 추이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1인당 주거비 = 각년도 소득 분위별 주거비 / 각년도 소득 분위별 가구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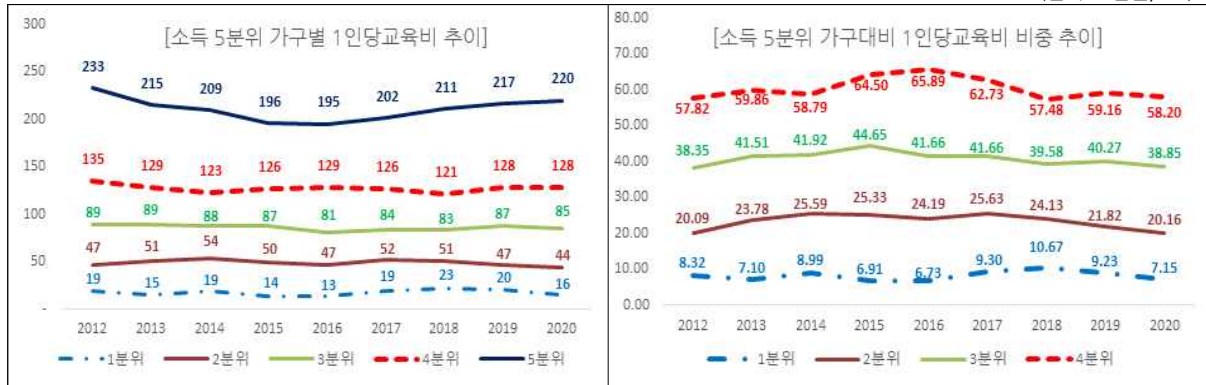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교육비 지출은 소득 5분위별 모든 가구 집단에서 줄었는데, 특히 소득 하위 분위일수록 감소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분위별 교육비 감소율은 1분위(-29.03%), 2분위(-20.51%), 3분위(-13.72%), 4분위(-7.86%), 5분위(-8.24%) 등이었다.

2020년 기준 교육비 지출액은 5분위 가구가 79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4분위(422만원), 3분위(239만원), 2분위(93만원), 1분위(22만원) 등으로 분위 간 위계가 확실하게 나타났는데, 1인당 교육비 또한 5분위(220만원), 4분위(128만원), 3분위(85만원), 2분위(44만원), 1분위(16만원) 등으로 다른 비목별 지출과는 달리 분위 간 위계의 변화가 없었다.

##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

[그림8] 소득 5분위별 1인당 교육비 및 5분위 가구 대비 비중 추이

(단위 :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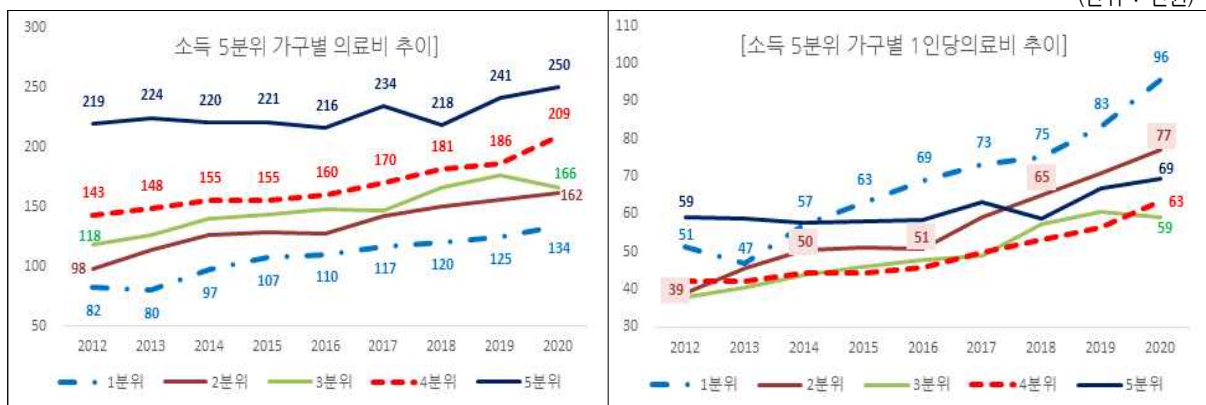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1인당 교육비 = 각년도 소득 분위별 교육비 / 각년도 소득 분위별 가구원 수

2020년 기준 가구주 평균 연령이 67.7세인 1분위 가구를 제외하고, 2분위(57.6세), 3분위(52.7세), 4분위(51.0세), 5분위(51.4세) 등으로 편차가 크지 않아, 가구원 중 비슷한 연령대의 학령기 자녀가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2020년 기준 소득 최상위 가구 집단인 5분위 가구 대비 1인당 교육비 비중을 보면, 소득 차상위 가구 집단인 4분위 가구조차 58.20% 수준에 불과했고, 3분위 가구는 38.85%, 2분위 가구는 20.16% 정도를 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학력별 소득 격차가 매우 큰 우리 사회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의 소득 불평등이 미래 세대에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림9] 소득 5분위별 의료비 및 1인당 의료비 추이

(단위 : 만원)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1인당 의료비 = 각년도 소득 분위별 의료비 / 각년도 소득 분위별 가구원 수

소득 분위별 가구 집단 모두 의료비 지출은 크게 늘었는데, 특히 1분위(63.41%), 2분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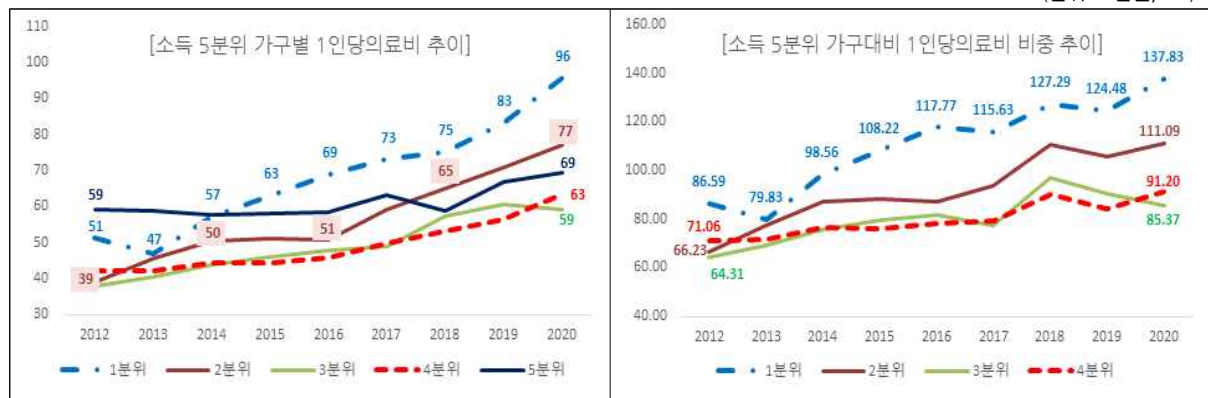


(65.31%)의 증가율이 높았으며, 3분위(40.68%)와 4분위(46.15%)도 높은 편이었으며, 5분위 가구는 14.16%로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2020년 기준 의료비 지출액은 5분위(250만원), 4분위(209만원), 3분위(166만원), 2분위(162만원), 1분위(134만원) 등이었다. 하지만 1인당 의료비를 산출해보면 오히려 소득 하위 분위의 의료비 지출이 더 많았다. 1분위 가구의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은 9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분위(77만원), 5분위(69만원), 4분위(63만원), 3분위(59만원) 등의 순이었다.

[그림10] 소득 5분위별 1인당 의료비 및 5분위 가구 대비 비중 추이

(단위 : 만원,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1인당 의료비 = 각년도 소득 분위별 의료비 / 각년도 소득 분위별 가구원 수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1분위 가구의 1인당 의료비 증가율은 86.76%(51→96만원)였으며, 2분위 가구는 96.79%(39→77만원)로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그 밖에 3분위(55.75%), 4분위(50.58%) 등이었으며, 5분위 가구 1인당 의료비 증가율은 17.33%(59→69만원)로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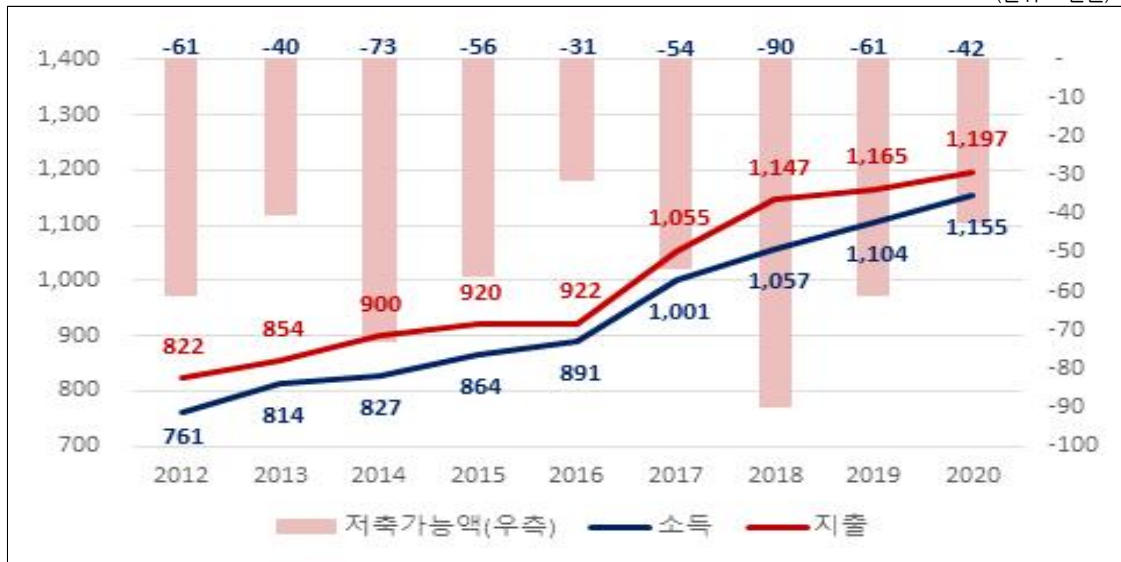
5분위 가구 대비 1인당 의료비 비중 추이를 보면, 1분위 가구의 경우 2012년 86.59%에서 2015년 108.22%로 5분위 가구를 넘어선 이후 2020년 137.83%까지 급증했다. 2분위 가구는 2012년 66.23%에 불과했으나 2018년 110.69%, 2020년 111.09%까지 증가했다.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소득에서 총지출(소비지출+비소비지출)을 차감한 저축가능액 순증액을 보면, 5분위 2,399만원(3,749→6,148만원), 4분위 1,192만원(1,350→2,542만원), 3분위 697만원(642→1,339만원), 2분위 296만원(248→544만원) 등이었다. 1분위는 2020년에도 -42만원으로 여전히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2020년 기준 1분위 소득액은

1,155만원, 지출액은 1,197만원(소비지출 1,050만원 + 비소비지출 147만원)으로, 여전히 총지출액이 소득액을 초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림11] 소득 1분위 가구 소득 및 지출, 저축가능액 추이

(단위 : 만원)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표6] 소득 5분위별 소득 및 지출액, 저축가능액 추이

(단위 : 만원, %, %p)

| 구 분 |      | 소득액(a) | 소비지출(b) | 비소비지출① | 저축가능액(a-b-c) | 지출액 / 소득액 | 저축가능액 / 소득액 |
|-----|------|--------|---------|--------|--------------|-----------|-------------|
| 1분위 | 2012 | 761    | 744     | 78     | (61)         | 108.02    | -8.02       |
|     | 2020 | 1,155  | 1,050   | 147    | (42)         | 103.64    | -3.64       |
|     | 증감   | 394    | 306     | 69     | 19           | (4.38)    | 4.38        |
|     | 증가율  | 51.77  | 41.13   | 88.46  | n/a          | n/a       | n/a         |
| 2분위 | 2012 | 1,991  | 1,456   | 287    | 248          | 87.54     | 12.46       |
|     | 2020 | 2,763  | 1,825   | 394    | 544          | 80.31     | 19.69       |
|     | 증감   | 772    | 369     | 107    | 296          | (7.23)    | 7.23        |
|     | 증가율  | 38.77  | 25.34   | 37.28  | 119.35       | -8.26     | 58.07       |
| 3분위 | 2012 | 3,344  | 2,163   | 539    | 642          | 80.80     | 19.20       |
|     | 2020 | 4,671  | 2,604   | 728    | 1,339        | 71.33     | 28.67       |
|     | 증감   | 1,327  | 441     | 189    | 697          | (9.47)    | 9.47        |
|     | 증가율  | 39.68  | 20.39   | 35.06  | 108.57       | -11.72    | 49.31       |
| 4분위 | 2012 | 5,050  | 2,833   | 867    | 1,350        | 73.27     | 26.7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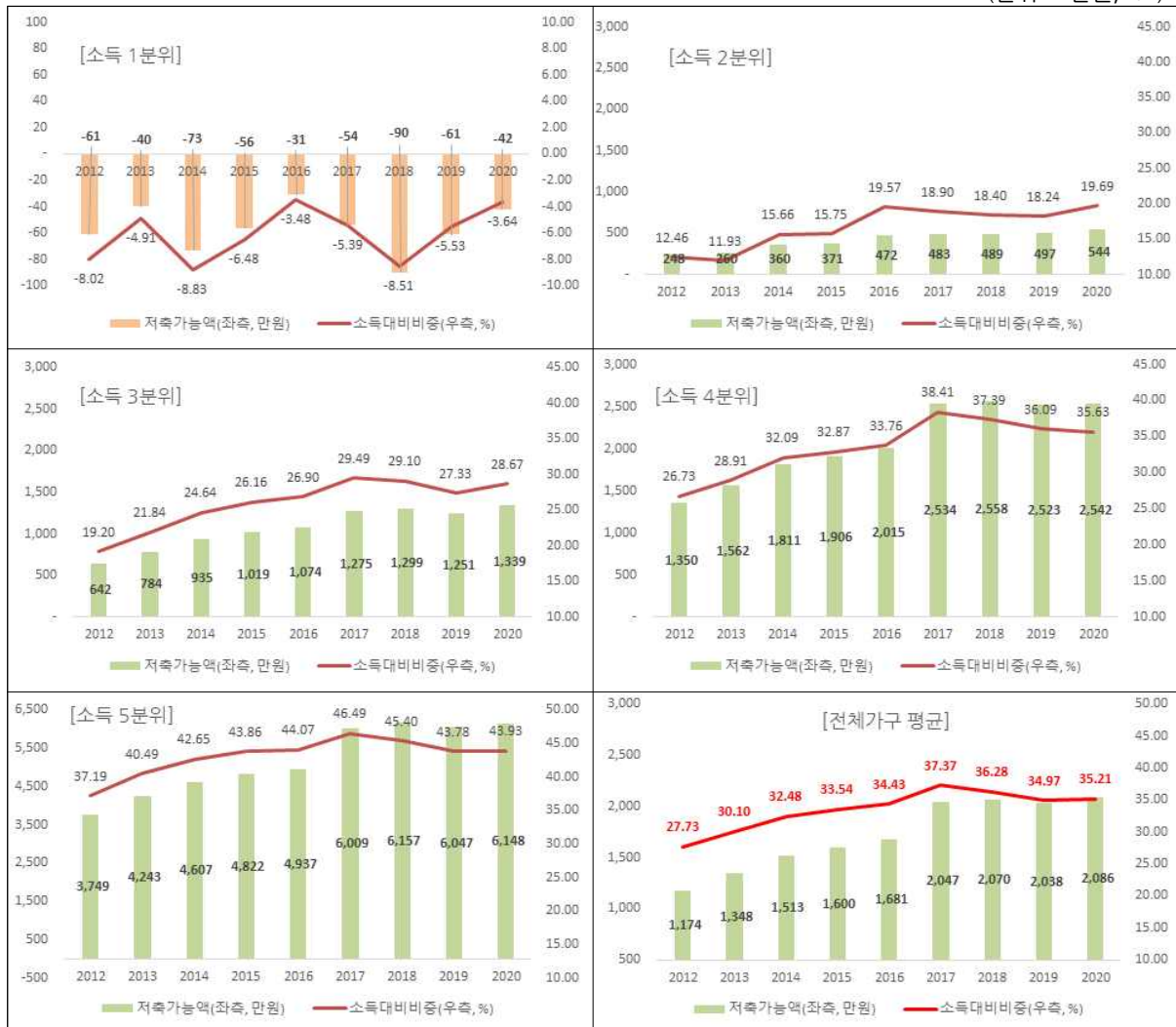
|     |      |        |       |       |       |        |       |
|-----|------|--------|-------|-------|-------|--------|-------|
|     | 2020 | 7,135  | 3,384 | 1,209 | 2,542 | 64.37  | 35.63 |
|     | 증감   | 2,085  | 551   | 342   | 1,192 | (8.89) | 8.89  |
|     | 증가율  | 41.29  | 19.45 | 39.45 | 88.30 | -12.14 | 33.27 |
| 5분위 | 2012 | 10,081 | 4,316 | 2,016 | 3,749 | 62.81  | 37.19 |
|     | 2020 | 13,995 | 4,798 | 3,049 | 6,148 | 56.07  | 43.93 |
|     | 증감   | 3,914  | 482   | 1,033 | 2,399 | (6.74) | 6.74  |
|     | 증가율  | 38.83  | 11.17 | 51.24 | 63.99 | -10.73 | 18.13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주) 저축가능액 = 소득 - (소비지출 + 비소비지출)

[그림12] 소득 5분위별 저축가능액 및 소득 대비 비중 추이

(단위 : 만원,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소득 대비 저축가능액 비중을 보면, 적자 가구인 1분위 가구를 제외하고 모두 늘어났다. 5분위는 6.74%p(37.19→43.93%), 4분위는 8.89%p(26.73→35.63%), 3분위는 9.47%p(19.20→28.67%), 2분위 가구는 7.23%p(12.46→19.69%) 상승했다. 2020년 기준 전체 가구 평균 비중 35.21%보다 높은 소득 분위는 5분위(43.93%)와 4분위(35.63%) 가구였다. 한편 2~5분위 가구 집단 모두 2017년을 전후로 저축가능액 비중 상승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다.

5분위 가구의 경우 2020년 소득액 13,995만원의 43.93%인 6,148만원을 저축할 수 있었는데, 이는 2020년 1분위 가구 소득액 1,155만원보다 5.3배나 많았다.

[그림13] 소득 5분위 대비 분위별 저축가능액 비중 / 서울아파트 평균매매가 저축 소요기간

(단위 : %, 년)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및 KB주택가격동향에 의거 저자 계산

주) 서울아파트 평균매매가 저축 소요기간 = 각년도 12월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 각년도 소득 분위별 저축가능액

소득과 저축가능액이 가장 많은 5분위 가구 대비 분위별 저축가능액 비중을 산출하여 상대적인 변화를 살펴보았다. 소득 최하위 1분위 가구는 기준연도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외 분위 가구는 모두 2012년 대비 비중이 상승했는데, 2분위 가구는 2.23%p(6.62→8.85%), 3분위는 4.66%p(17.12→21.78%), 4분위는 5.34%p(36.01→41.35%) 상승했다.

소득 5분위별 저축가능액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았다. 아파트 가격은 KB주택가격동향에 의거 각 년도 1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활용하였는데, 평균 매매가는 2012년 12월 50,780만원에서 2016년 59,670만원으로, 2020년 12월에는 104,299만원까지 급상승하였다.

소득 최상위 5분위 가구의 경우 저축가능액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2012년에

는 13.54년이 걸렸지만, 2020년 기준으로는 16.96년을 필요로 했다. 2020년 기준 소득 차상 위 가구인 4분위 가구는 저축가능액을 41.03년간 모아야 했고, 3분위 가구는 77.89년, 2분위 가구는 191.73년을 필요로 하는 등 사실상 서울에서 자가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매년 저축가능액이 마이너스로 가게 재정이 적자 상태인 1분위 가구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었다. 사실상 5분위 가구만 자기 소득만으로 서울에서 주택 구매가 가능한 상태로, 현재 무주택 상태인 가구 모두 주거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

[그림14] 전체 가구 평균 소득 대비 분위별 소득 비중 변화

(단위 : %, %p)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지난 10년(2010~2020년) 소득 5분위 가구 간 소득 불평등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가구 평균 소득 대비 각 소득 분위별 가구소득 비중 변화를 산출하였다. 먼저 세전소득인 경상소득 비중 변화를 보면, 1분위 가구의 경우 비중이 1.50%p(18.00→19.50%) 늘었고, 소득 최상위 5분위 가구 또한 0.81%p(233.88→234.70%) 상승했지만, 2분위(-1.39%p) · 3분위(-0.67%p) · 4분위(-0.22%p) 가구 모두 비중이 하락하는 등 소득 불평등은 여전한 상태였다.

세후소득인 처분가능소득의 경우, 전체 평균 대비 5분위 소득 비중은 -6.50%p(231.78→225.28%) 하락했지만, 1분위(2.16%p) · 2분위(0.59%p) · 3분위(1.96%p) · 4분위(1.82%p) 가구 모두 비중이 상승하면서, 미미하지만 세후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개선 정도가 소득세가 있는 사회라면 당연히 나타날 만한 수준이라,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판단하기는 힘들었다.

그런데 균등화 소득<sup>8)</sup> 기준으로 정부(통계청)가 발표하는 소득 5분위 배율 추이를 보면,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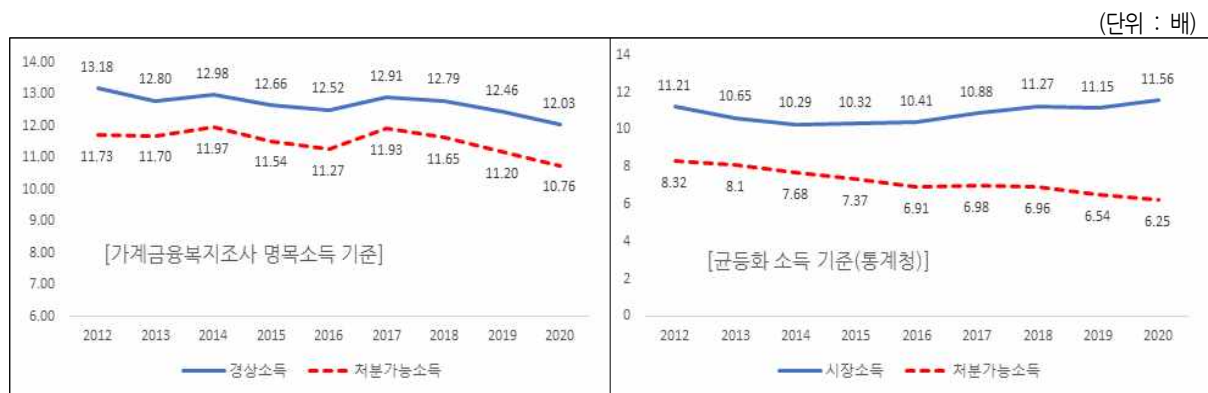
8) 가구원 수가 다른 가구 간의 후생(복지)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구소득을  $\sqrt{\text{가구원수}}$ 로 나눈 소득



장소득<sup>9)</sup> 5분위 배율은 2012년 11.21배에서 2020년 11.56배로 소폭 늘어났지만, 처분가능소득<sup>10)</sup> 5분위 배율은 8.32배에서 6.25배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간 격차가 꾸준히 커지고 있는 등, 통계청 기준으로는 세후 소득 분배 개선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경상소득, 처분가능소득) 데이터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소득 5분위 배율 추이를 산출해보면 세후 소득분배 개선 효과는 불분명했다. 경상소득 5분위 배율은 2012년 13.18배에서 2020년 12.03배로 하락했고,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또한 11.73배에서 10.76배로 하락하면서 소득 상·하위 20% 가구 간 소득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정부 발표 균등화 소득 기준과는 달리 경상소득과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간 격차가 비교적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현행 소득 구간별 과세 체계에서 일정하게 존재하는 세금 효과일 뿐이지,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제 및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림15] 명목소득 및 균등화 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비교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 2) 가구 재무(자산&부채)상태 변화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총자산 순증액은 5분위 가구가 34,825만원(63,229→98,054만원), 4분위는 20,329만원(29,093→49,422만원), 3분위는 16,219만원(19,857→36,076만원), 2분위는 10,434만원(15,089→25,523만원), 1분위 가구는 2,491만원(11,138→13,629만원) 등이었다.

총자산 순증액은 상위 분위일수록 많았지만, 총자산 증가율은 3분위 가구가 81.68%로 가장

9)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지출)을 균등화한 소득

10) 균등화 시장소득(=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 이전소득 - 사적 이전지출)을 균등화한 소득



높았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순증액 2,491만원은 2분위 가구 순증액 10,434만원보다도 현격하게 적었고, 증가율 또한 22.36%로 소득 5분위 중 가장 낮았는데, 주된 원인은 소득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은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7]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단위 : 만원, %)

| 구 분 |      | 순자산    | 자산     |        |        | 부채     |        |       |
|-----|------|--------|--------|--------|--------|--------|--------|-------|
|     |      |        |        | 금융자산   | 실물자산   |        | 금융부채   | 임대보증금 |
| 1분위 | 2010 | 9,929  | 11,138 | 1,746  | 9,392  | 1,210  | 819    | 391   |
|     | 2020 | 11,877 | 13,629 | 2,944  | 10,685 | 1,752  | 1,182  | 570   |
|     | 증감액  | 1,948  | 2,491  | 1,198  | 1,293  | 542    | 363    | 179   |
|     | 증가율  | 19.62  | 22.36  | 68.61  | 13.77  | 44.79  | 44.32  | 45.78 |
| 2분위 | 2010 | 12,868 | 15,089 | 2,976  | 12,114 | 2,221  | 1,507  | 714   |
|     | 2020 | 21,467 | 25,523 | 5,760  | 19,763 | 4,056  | 2,850  | 1,206 |
|     | 증감액  | 8,599  | 10,434 | 2,784  | 7,649  | 1,835  | 1,343  | 492   |
|     | 증가율  | 66.82  | 69.15  | 93.55  | 63.14  | 82.62  | 89.12  | 68.91 |
| 3분위 | 2010 | 16,497 | 19,857 | 4,648  | 15,208 | 3,360  | 2,223  | 1,137 |
|     | 2020 | 29,225 | 36,076 | 8,669  | 27,407 | 6,851  | 5,131  | 1,719 |
|     | 증감액  | 12,728 | 16,219 | 4,021  | 12,199 | 3,491  | 2,908  | 582   |
|     | 증가율  | 77.15  | 81.68  | 86.51  | 80.21  | 103.90 | 130.81 | 51.19 |
| 4분위 | 2010 | 24,306 | 29,093 | 6,839  | 22,254 | 4,787  | 3,261  | 1,526 |
|     | 2020 | 39,447 | 49,422 | 11,654 | 37,768 | 9,975  | 7,757  | 2,218 |
|     | 증감액  | 15,141 | 20,329 | 4,815  | 15,514 | 5,188  | 4,496  | 692   |
|     | 증가율  | 62.29  | 69.88  | 70.41  | 69.71  | 108.38 | 137.87 | 45.35 |
| 5분위 | 2010 | 51,717 | 63,229 | 13,217 | 50,011 | 11,512 | 7,941  | 3,571 |
|     | 2020 | 79,409 | 98,054 | 23,493 | 74,561 | 18,645 | 13,326 | 5,319 |
|     | 증감액  | 27,692 | 34,825 | 10,276 | 24,550 | 7,133  | 5,385  | 1,748 |
|     | 증가율  | 53.55  | 55.08  | 77.75  | 49.09  | 61.96  | 67.81  | 48.95 |

자료) 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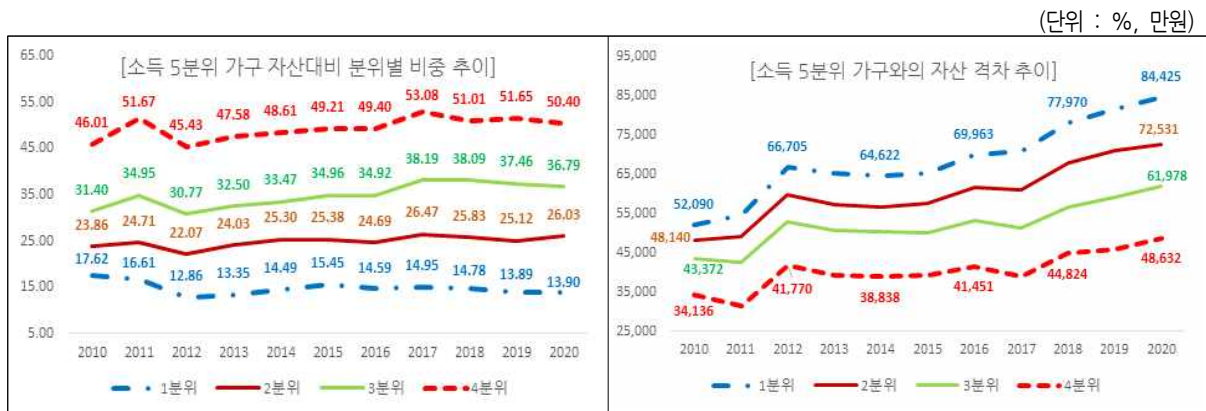
5분위 가구 대비 분위별 총자산 비중을 보면, 1분위 가구 총자산 비중은 2010년 17.62%에서 2020년 13.90%로 -3.72%p 감소했다. 반면 3분위 가구는 5.39%p(31.40→36.79%), 4분

위는 4.39%p(46.01→50.40%), 2분위는 2.17%p(23.86→26.03%) 등으로 비중이 상승했다.

5분위 대비 총자산 비중이 줄어든 1분위 가구는 물론, 비중이 상승한 2~4분위 가구 또한 5분위 가구와의 자산 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었다.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 간의 자산 격차는 2010년 52,090만원에서 2020년 84,425만원으로 32,335만원 더 벌어졌고, 2분위 24,391만원(48,140→72,531만원), 3분위 18,606만원(43,372→61,978만원), 4분위 14,496만원(34,136→48,632만원) 등으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특히 [그림16]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 5분위 가구와 여타 분위와의 자산 격차는 2017년부터 큰 폭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2016년부터 본격화된 주택가격 급등의 영향이라 분석된다. 결국 주택가격의 상승이 자산 불평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16] 5분위 가구 대비 분위별 자산 비중 및 소득 격차 추이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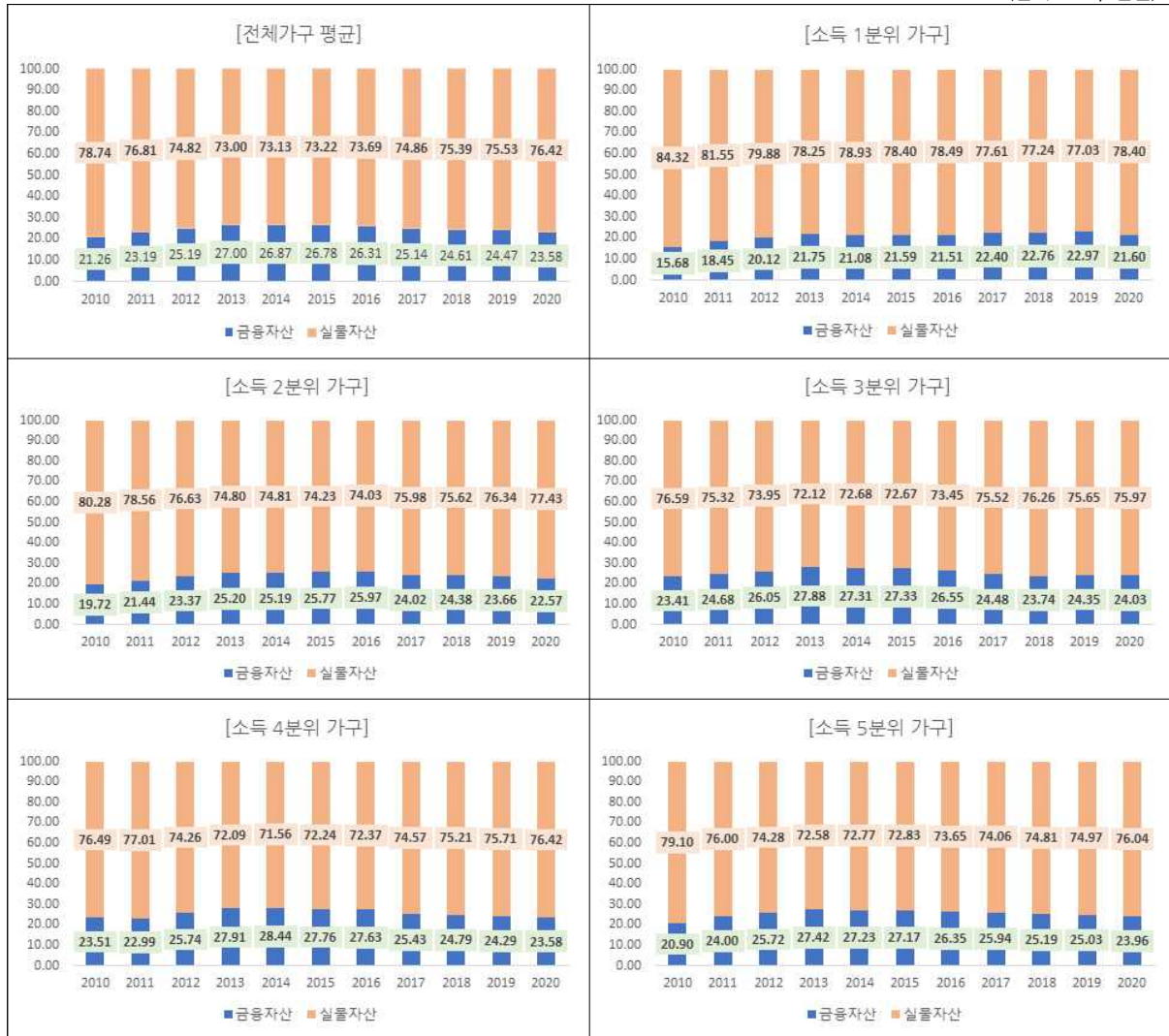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 평균 실물자산 비중은 76.42%였는데, 소득 5분위별 가구 중 실물자산 비중은 1분위(78.40%) 가구가 가장 높았고, 2분위(77.43%), 4분위(76.42%), 5분위(76.04%), 3분위(75.97%) 등으로, 큰 편차는 없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금융자산 비중은 2010년 15.68%에서 2020년 21.60%로 37.75% 증가, 소득 5분위 가구 중 금융자산 증가율이 가장 높았는바, 2010년 84.32%에 달했던 실물자산 비중은 2020년 78.40%까지 하락했다.

1분위 가구 다음으로, 실물자산 비중이 높은 소득 분위는 2분위 가구로 2020년 기준 77.43%였다. 소득 1, 2분위 가구, 즉 저소득 가구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실물자산 비중은 더 높았는데, 이는 1분위 가구는 적자 상태로 저축가능액 자체가 없는 상태고, 2분위 가구는 저축이나 금융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17] 소득 5분위 가구별 실물자산 및 금융자산 비중 추이

(단위 : %, 만원)



자료) 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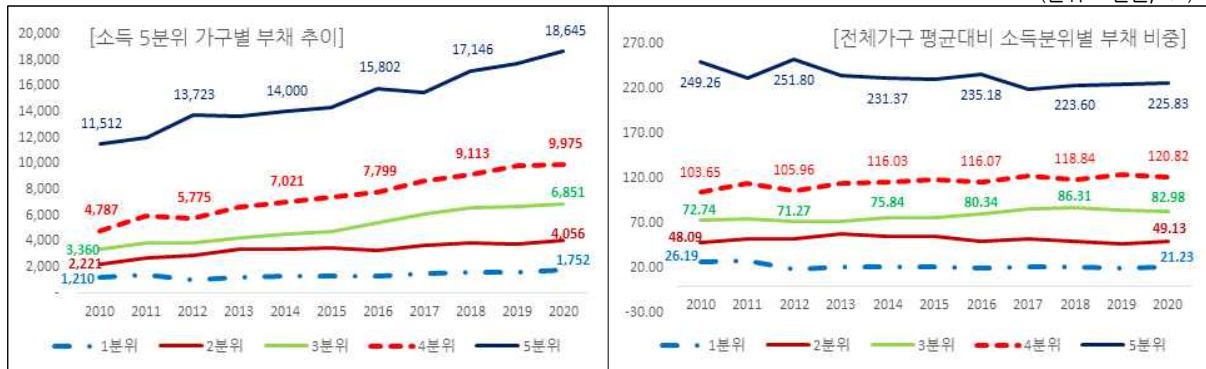
소득 상위 분위일수록 자산 보유액은 물론 부채 보유액도 많았고,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부채 순증액도 많았다. 5분위 가구 부채 순증액은 7,133만원(11,512→18,64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분위 5,188만원(4,787→9,975만원), 3분위 3,491만원(3,360→6,851만원), 2분위 1,835만원(2,221→4,056만원), 1분위 542만원(1,210→1,752만원) 등이었다.

1분위 가구를 제외하고 부채 중에서는 임대보증금 부채보다 금융부채 증가율이 더 두드러졌다. 금융부채 증가율은 5분위(67.81%), 4분위(137.87%), 3분위(130.81%), 2분위(89.12%) 등이었는데, 임대보증금 증가율은 5분위(48.95%), 4분위(45.35%), 3분위(51.19%), 2분위

(68.91%) 등으로 금융부채 증가율보다 낮았다. 1분위 가구는 금융부채 증가율(44.32%)과 임대보증금 증가율(45.78%)이 유사했다.

[그림18] 소득 5분위별 부채 / 전체 가구 평균 부채 대비 분위별 부채 비중 추이

(단위 :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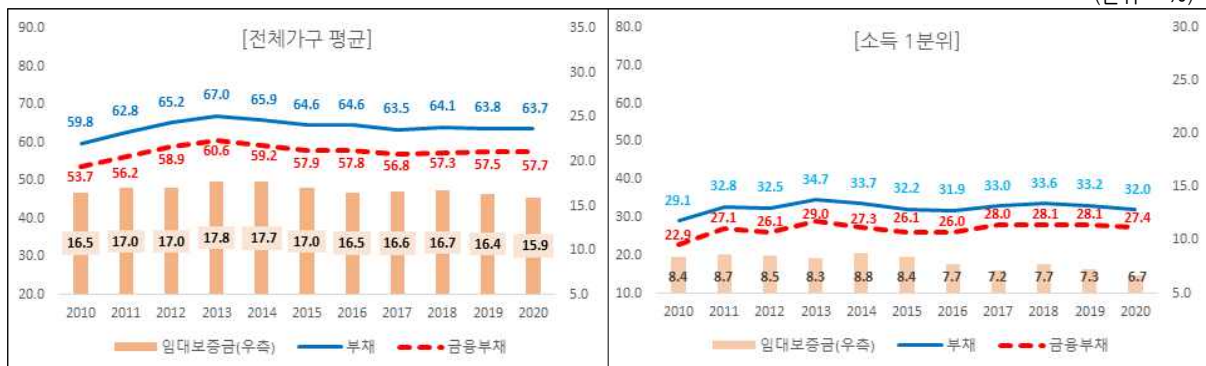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및 저자계산

2020년 4분위 가구 부채액 9,975만원은 5분위 가구 부채액 18,645만원의 53.5%에 불과했고, 1분위 가구 부채액 1,752만원은 5분위 부채액의 9.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5분위 가구의 부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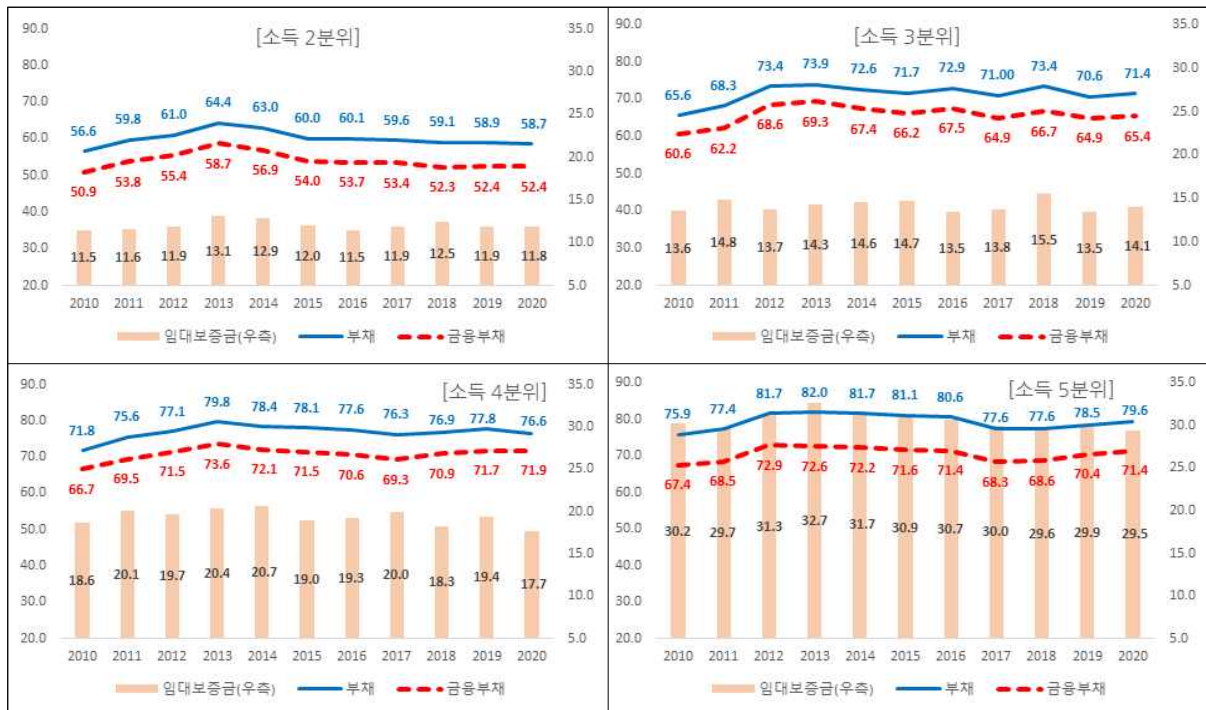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부채도 많다는 것은, 전체 가구 평균 부채 대비 소득 분위별 부채 비중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전체 가구 평균 부채보다 부채 보유액이 많았던 소득 분위는 4분위와 5분위 가구였는데, 2020년 기준 5분위 가구 부채 비중은 225.83%에 달했고, 4분위 가구는 120.82%였다. 그 외 3분위(82.98%), 2분위(49.13%), 1분위(21.23%) 등으로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평균 부채 대비 비중도 적었다.

[그림19] 소득 5분위별 부채 · 금융부채 및 임대보증금 보유 가구분포 추이

(단위 : %)







자료) 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소득 5분위별 가구 집단 모두 부채보유 가구분포가 늘어났는데, 1분위(2.9%p), 2분위(2.1%p), 3분위(5.8%p), 4분위(4.8%p), 5분위(3.7%p) 등이었다.

전체 가구 평균으로 볼 때, 부채 중 임대보증금 보유 가구는 줄어들고, 금융부채 보유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었는데, 소득 5분위 중 2분위(0.3%p)와 3분위(0.5%p) 가구는 임대보증금 보유 가구분포도 늘어났다. 이외의 소득 분위 모두 임대보증금 보유 가구분포는 줄어들었고, 금융부채 보유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났다.

한편 1분위 가구는 부채증가율이 가장 낮았음에도, 부채보유 가구분포 증가율은 9.87%로 가장 높았는데, 1분위 가구가 적자 가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를 위한 대출이 아니라 가정 경제 유지에 필수적인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소득 5분위 가구별 부채증가율도 1분위(44.79%), 2분위(82.62%), 3분위(103.90%), 4분위(108.38%), 5분위(61.96%) 등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원리금상환액 증가율은 1분위 253.85%(69→242만원), 2분위 106.18%(264→545만원), 3분위 173.76%(381→1,044만원), 4분위 163.20%(622→1,636만원), 5분위 117.32%(1,136→2,468만원) 등으로 부채증가율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 가계 전반적으로 원리금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증가율보다 원리금상환액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전반적으로 대출 거치 기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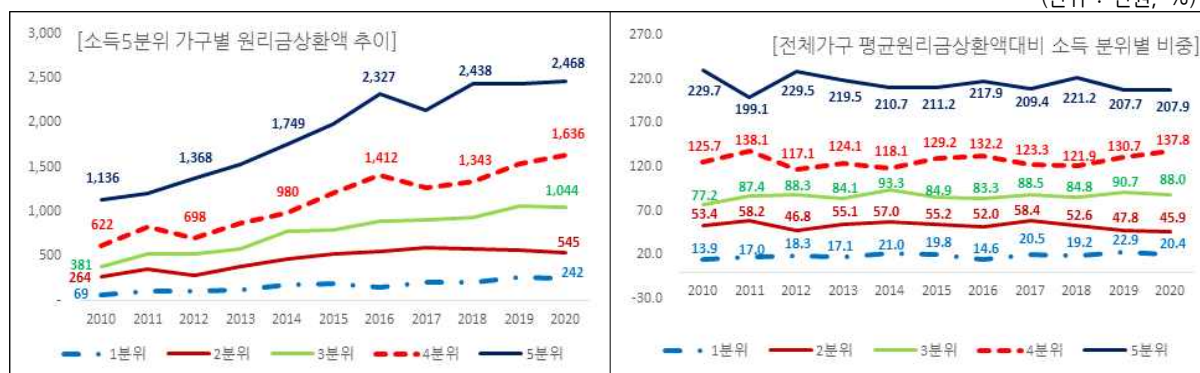
원리금상환액 순증액은 1분위(174만원), 2분위(281만원), 3분위(663만원), 4분위(1,014만원), 5분위(1,332만원) 등으로 가계소비를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가구 평균 원리금상환액 대비 소득 분위별 원리금상환액 비중 추이를 보면, 부채 비중에서와 마찬가지로 2020년 기준 5분위(207.9%)와 4분위(137.8%) 가구가 전체 평균보다 원리금상환액이 더 많았다. 2020년 기준 전체 가구 평균 부채 대비 5분위 가구 부채 비중은 225.83%였는데,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207.9%로 부채 비중보다는 낮았다. 이는 5분위 가구의 소득이 높아, 신용등급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낮은 금리 혜택을 받기 때문이라 추정된다.

반면 1분위 가구의 경우 전체 가구 평균 대비 부채 비중은 2010년 26.19%에서 2020년 21.23%로 -4.96%p 줄었음에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13.9%에서 20.4%로 6.5%p 상승했는데, 이는 1분위 가구가 보유 자산이 적어 담보력이 부족한데다 소득도 적기 때문에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가 높게 적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림20] 소득 5분위별 원리금상환액 추이 / 전체 가구 평균 원리금상환액 대비 분위별 비중 추이

(단위 : 만원, %)



자료) 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순자산 순증액은 5분위 가구가 27,692만원(51,717→79,40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분위 15,141만원(24,306→39,447만원), 3분위 12,728만원(16,497→29,225만원), 2분위 8,599만원(12,868→21,467만원), 1분위 1,948만원(9,929→11,877만원) 가구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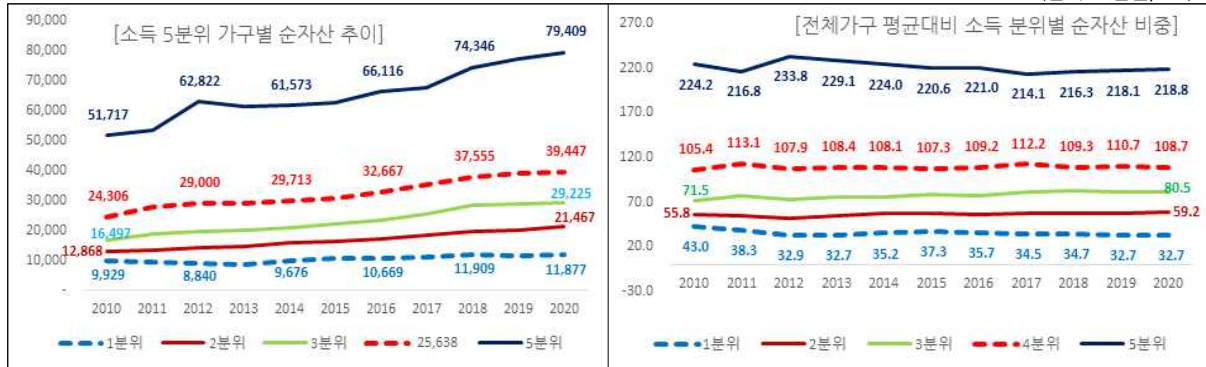
전체 가구 평균 순자산 대비 분위별 순자산 비중을 보면, 5분위 가구는 2010년 224.2%에서 2020년 218.8%로 -5.4%p 감소했지만, 1분위 가구는 43.0%에서 32.7%로 10.3%p나 감소했다. 1분위 가구의 순자산 비중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가구소득이 적어 필수적인 지출조차



감당하지 못해 적자 살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21] 소득 5분위별 순자산 추이 / 전체 가구 평균 순자산 대비 분위별 비중 추이

(단위 : 만원, %)



자료) 가계금융조사(2010~2011), 가계금융복지조사(2012~2020) 보고서 및 통계표

### 3) 가구 재무 건전성 추이

2010년에서 2020년 사이 소득 5분위별 소득 및 재무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무엇보다 부채와 원리금상환액이 여타 항목들과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가구들의 재무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지, 부채상환 여력은 충분한지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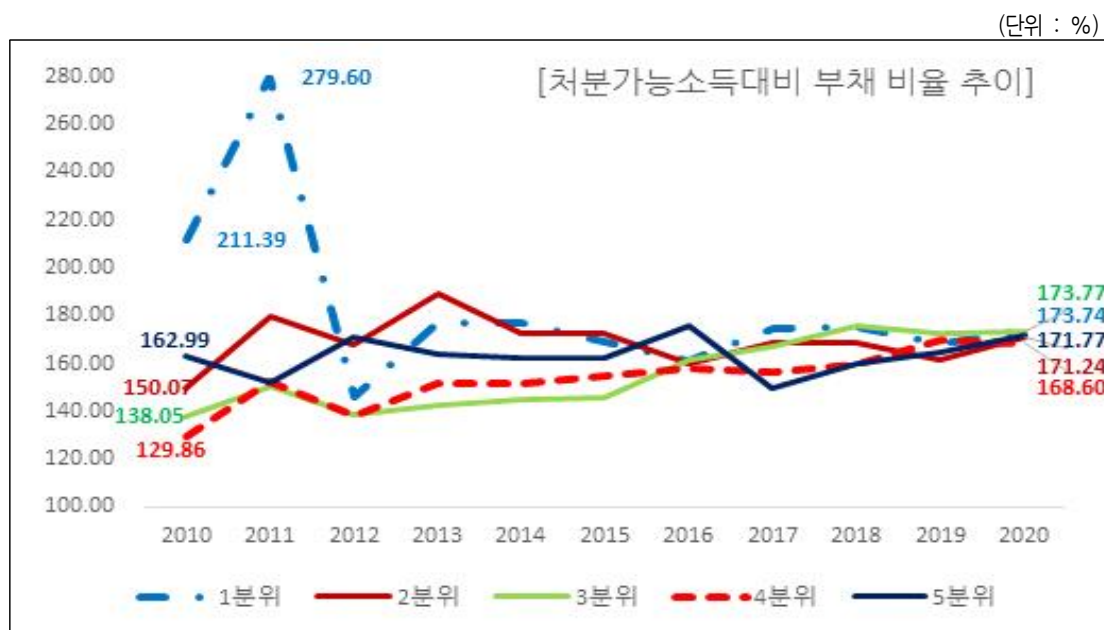
먼저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보면, 1분위 가구를 제외하고 2~4분위 가구 모두 동 비율이 상승했다. 1분위 가구는 2010년 211.39%에서 2020년 173.74%로 -37.65%p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2020년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보면, 3분위 가구가 173.77%로 가장 높았고, 1분위(173.74%), 5분위(171.77%), 2분위(171.24%), 4분위(168.60%) 가구의 순이었다. 기준 연도인 2010년에는 4분위 가구가 129.86%로 가장 낮았고, 1분위 가구가 211.39%로 소득 분위별 편차가 컸지만, 2020년에는 4분위 가구가 168.60%로 가장 낮았고 최고 비율 또한 3분위 가구 173.77%로 소득 분위 간 편차가 거의 없이 170%대로 수렴하고 있는 양상이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비율만으로 가계의 상환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가계의 부채비율 약 170%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e-나라지표’에서 제공되는 2019년 OECD 기준에 의한 주요 국가들의 ‘가구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한국이 190.6%로 스페인(105.0%),

프랑스(122.1%), 영국(142.1%), 핀란드(148.2%)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22] 소득 5분위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 추이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한편 소득 5분위별 가구 집단 모두 2010년과 비교할 때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이 늘어나면서 가계의 소비지출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분위 가구의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2010년 11.97%에서 2020년 24.03%로 100.74% 증가하면서 가뜩이나 적자 상태인 가정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었다. 2020년 기준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2분위(23.00%), 3분위(26.48%), 4분위(27.65%), 5분위(22.73%) 등이었다.

[표8] 소득 5분위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및 원리금상환액 비율 추이 (단위 : %, %p)

| 구 분  | 부채 / 처분가능소득 |        |        |        |        |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 |       |       |       |       |
|------|-------------|--------|--------|--------|--------|---------------|-------|-------|-------|-------|
|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 2010 | 211.39      | 150.07 | 138.05 | 129.86 | 162.99 | 11.97         | 17.85 | 15.67 | 16.86 | 16.08 |
| 2011 | 279.60      | 180.14 | 150.62 | 152.32 | 152.10 | 19.82         | 22.99 | 20.58 | 21.28 | 15.17 |
| 2012 | 146.41      | 167.98 | 138.47 | 138.39 | 171.24 | 15.96         | 16.36 | 18.75 | 16.73 | 17.07 |
| 2013 | 176.86      | 189.08 | 142.42 | 151.59 | 163.96 | 16.69         | 21.17 | 19.70 | 19.63 | 18.3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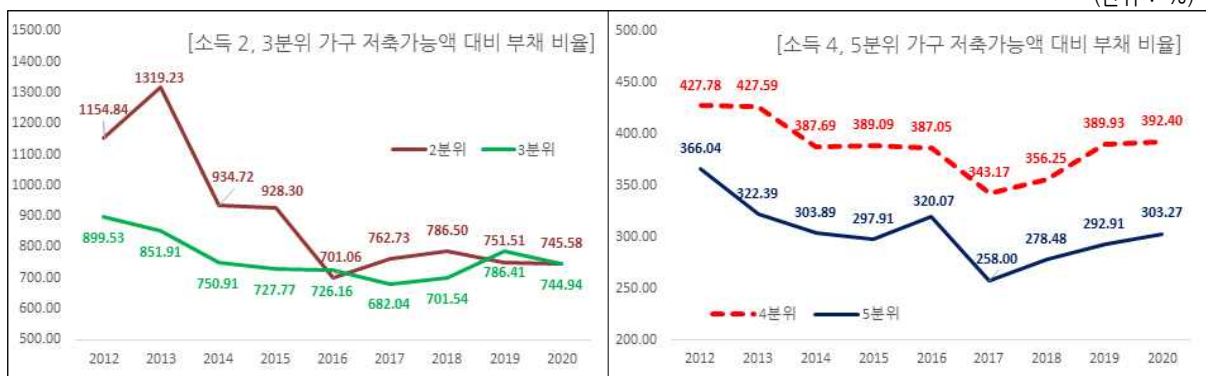
|      |        |        |        |        |        |        |       |       |       |       |
|------|--------|--------|--------|--------|--------|--------|-------|-------|-------|-------|
| 2014 | 176.84 | 172.48 | 145.22 | 151.64 | 162.19 | 24.13  | 24.24 | 24.49 | 21.17 | 20.26 |
| 2015 | 168.89 | 172.29 | 145.98 | 155.21 | 162.76 | 24.31  | 25.96 | 24.49 | 25.45 | 22.51 |
| 2016 | 161.43 | 160.32 | 161.28 | 158.23 | 176.18 | 19.60  | 26.89 | 26.59 | 28.65 | 25.94 |
| 2017 | 174.63 | 168.76 | 167.04 | 156.40 | 149.95 | 24.22  | 27.39 | 24.82 | 22.72 | 20.74 |
| 2018 | 175.71 | 169.05 | 176.01 | 159.63 | 160.36 | 23.09  | 25.49 | 24.84 | 23.52 | 22.80 |
| 2019 | 168.06 | 161.27 | 172.81 | 169.85 | 165.10 | 28.08  | 24.27 | 27.69 | 26.52 | 22.74 |
| 2020 | 173.74 | 171.24 | 173.77 | 168.60 | 171.77 | 24.03  | 23.00 | 26.48 | 27.65 | 22.73 |
| 증감   | -37.65 | 21.17  | 35.72  | 38.73  | 8.78   | 12.06  | 5.15  | 10.81 | 10.79 | 6.66  |
| 증가율  | -17.81 | 14.11  | 25.87  | 29.83  | 5.39   | 100.74 | 28.83 | 68.98 | 63.97 | 41.40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소득 5분위별 유동성 분석 차원에서, 가구들이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한 여유자금(저축가능액)을 가지고 부채 규모를 분석하였다. 처분가능소득은 경상소득에서 비소비지출만을 차감한 것이기 때문에 일상 유지에 필요한 생활비를 포함하고 있다. 필수 경비인 생활비마저 부채상환에 사용할 수는 없기에 저축가능액으로 부채 규모를 가늠해보려는 시도다.

[그림23] 소득 5분위별 저축가능액 대비 부채 비율 추이

(단위 :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1분위 가구의 경우 소득에서 지출을 차감한 값이 적자상태이기에 저축가능액 대비 부채비율을 산출할 수 없었다. 2분위 가구의 경우 저축가능액 대비 부채비율은 2012년 1154.84%에서 2020년 745.58%로 -409.26%p 줄었다. 저축가능액 대비 부채비율 745.58%가 의미하는 것은 2020년 2분위 가구 저축가능액 544만원으로 부채 4,056만원을 상환하려면 약 7.46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3분위 가구 또한 899.53%에서 744.94%로 줄었다. 2~3분위 가구의 경우

2010년 대비 부채비율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가 2016년 이후 감소세가 정체되는 양상이라 주의가 필요한 상태다.

4분위 가구는 2012년 427.78%에서 2020년 392.40%로 -35.38%p 줄었고, 5분위 가구 또한 366.04%에서 303.27%로 -62.77%p 줄어들면서, 유동성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4.5분위 가구의 경우 2017년을 기점으로 부채비율이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선제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표9]는가계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인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과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다.

분석 기간 중 순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분위가 2.57%p(12.18%→14.76%) 늘었고, 2분위 1.63%p(17.26→18.89%), 3분위 3.08%p(20.36→23.44%), 4분위 5.59%p(19.69→25.29%), 5분위 1.22%p(22.26→23.48%) 등 소득 분위별 가구 집단 모두 부채비율이 상승,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다소 나빠졌다. 문제는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버블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연착륙하지 못하고 급락하게 되면, 부채비율이 급등하면서 가계의 채무상환 위험이 급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가계의 유동성을 판단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인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보면, 1분위 -6.74%p(46.90→40.16%), 2분위 -1.16%p(50.64→49.48%), 5분위 -3.36%p(60.08→56.72%) 등 유동성이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3분위 가구는 11.37%p(47.82→59.19%), 4분위 가구는 18.88%p(47.69→66.56%)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되었다.

[표9] 소득 5분위별 재무 건전성 추이

(단위 : %, %p)

| 구 분  | 부채/순자산 |       |       |       |       | 금융부채/금융자산 |       |       |       |       |
|------|--------|-------|-------|-------|-------|-----------|-------|-------|-------|-------|
|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 2010 | 12.18  | 17.26 | 20.36 | 19.69 | 22.26 | 46.90     | 50.64 | 47.82 | 47.69 | 60.08 |
| 2011 | 15.37  | 20.54 | 20.31 | 21.43 | 22.57 | 52.06     | 54.63 | 47.90 | 54.11 | 52.07 |
| 2012 | 11.31  | 20.41 | 19.74 | 19.91 | 21.84 | 31.11     | 49.01 | 44.44 | 44.52 | 46.52 |
| 2013 | 14.37  | 23.45 | 20.99 | 22.97 | 22.25 | 34.78     | 52.10 | 44.67 | 46.86 | 43.76 |
| 2014 | 13.18  | 21.36 | 22.16 | 23.63 | 22.74 | 36.31     | 46.71 | 47.45 | 46.65 | 45.43 |
| 2015 | 12.17  | 21.37 | 21.47 | 24.31 | 22.91 | 31.31     | 47.20 | 46.58 | 50.47 | 47.15 |
| 2016 | 12.04  | 19.56 | 23.26 | 23.87 | 23.90 | 31.08     | 44.30 | 52.61 | 49.92 | 50.48 |
| 2017 | 13.88  | 20.12 | 23.78 | 24.56 | 22.94 | 35.95     | 48.69 | 59.51 | 56.06 | 49.72 |

|      |       |       |       |       |       |       |       |       |       |       |
|------|-------|-------|-------|-------|-------|-------|-------|-------|-------|-------|
| 2018 | 13.54 | 19.44 | 23.44 | 24.27 | 23.06 | 33.24 | 48.95 | 59.13 | 59.89 | 52.20 |
| 2019 | 13.96 | 18.63 | 23.09 | 25.19 | 23.02 | 32.66 | 48.24 | 57.36 | 63.82 | 52.94 |
| 2020 | 14.76 | 18.89 | 23.44 | 25.29 | 23.48 | 40.16 | 49.48 | 59.19 | 66.56 | 56.72 |
| 증감   | 2.57  | 1.63  | 3.08  | 5.59  | 1.22  | -6.74 | -1.16 | 11.37 | 18.88 | -3.36 |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거 저자 계산



### 3. 나가며

가구주 특성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분석했던 지난 2~3차 보고서에서 나타났듯이, 가구주 성별(여성, 남성), 종사상지위별(상용노동, 임시일용직, 자영업), 교육정도별(대졸, 고졸, 중졸, 초졸), 연령대별(20~60대) 가구 집단 간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었다.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소득원천 중 노동소득이었고, 자산 불평등의 주요 원인은 고소득·고자산 가구 집단이 부채를 대규모를 늘려 재산 증식에 활용함과 동시에 주택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었다.

이번 보고서는 소득 5분위별 가구소득 및 재무상태 변화를 분석했는데, 주요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소득 최하위 20% 가구인 1분위의 경우 2012년 이후 2020년 현재까지 소득보다 필수 경비지출이 더 많아 적자재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1분위 가구에 특화된 가정 경제 안정 대책이 절실히 보였다.

소득 최하위 20% 가구인 1분위의 경우, 소득에서 지출(소비지출+비소비지출)을 차감한 저축가능액을 보면 2012년 -61만원에서 2020년 -42만원으로 적자재정이 지속되었다. 2012년 1분위 가구 재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경상소득은 761만원, 총지출액은 822만원(소비지출 744만원 + 비소비지출 78만원)으로 -61만원 적자상태였다. 이후 적자 규모의 등락은 있었지만 단 한 해도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2020년 경상소득은 1,155만원, 총지출액은 1,197만원(소비지출 1,050만원 + 비소비지출 147만원)으로 적자액은 -42만원이었다.

둘째, 저소득 가구 집단인 1분위와 2분위 가구의 경우 주거비, 의료비 등 필수 경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으며, 특히 1분위 가구는 식료품비, 통신비, 교통비 등의 지출 또한 급증하고 있었다. 기본권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사회 복지정책이 재구축될 필요가 있다.

소득 분위별 1인당 주거비를 산출해보면, 2020년 기준 1분위 가구가 14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분위 가구는 14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3분위(119만원), 5분위(117만원), 4분위(107만원)의 순이었다.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주거비 증가율 또한 1분위가 45.64%로 가장 높았고, 이어 2분위(36.25%), 3분위(21.31%), 4분위(13.27%), 5분위(4.26%)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1인당 의료비 또한 1분위 가구가 9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분위(77만원), 5분위(69만원), 4분위(63만원), 3분위(59만원) 등의 순이었다. 1인당 의료비 증가율도 저

소득 가구인 1분위(86.76%)와 2분위(96.79%) 가구가 3분위(55.75%) 4분위(50.58%), 5분위(17.33%) 가구 등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2012년에서 2020년 사이 식료품비, 교통비, 통신비 등의 지출 또한 1분위 가구가 소득 5분위 가구 중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셋째, 소득 5분위 가구 간 교육비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학력별 소득 격차가 극심하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현재의 소득 불평등이 미래 세대에도 그대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았다. 소득 불평등을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무상 교육 등 공교육 체계를 대학까지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소득 재분배 관련 정책(소득세제 및 정부 지원금 등) 효과가 매우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련 정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대대적인 수술로 저소득 가구의 의료, 주거, 식품 등 기본권적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현행 소득 재분배 관련 정책효과가 매우 불분명하거나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다음과 같았다.

①소득 최상위 20% 가구 집단인 5분위 가구 대비 1분위와 4분위 가구의 소득 비중과 비중차(세후소득 비중 - 세전소득 비중)를 보면, 소득 최하위 1분위보다는 소득 차상위 4분위에서 세후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②5분위 가구와의 소득 격차 또한 1분위 가구는 2020년까지 꾸준히 확대되고 있었으나, 오히려 4분위 가구는 정체되고 있었는데, 고소득 가구 집단과 저소득 가구 집단 간 소득 격차가 조금도 줄지 않고 있었다.

③지난 10년(2010~2020년) 소득 5분위 가구 간 소득 불평등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 가구 평균 소득 대비 각 소득 분위별 가구소득 비중 변화를 산출하였으나, 세후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 정책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끝)